

第29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2 號

國會事務處

2010年11月5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 오늘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 일행이 우리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한국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 일행의 국회 방문과 본회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 수지 출신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선교 의원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는 서구 유럽을 비롯이라도 하듯이 정말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5.9%의 성장세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환율 또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또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세부과제를 지정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다문화사회, 저소득층, 나아가서 서민층을 위한 바우처제도의 재정비, 영어교육 또 유아 공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리께서 법조인이시고 법학자이시고 또 이번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시다라는 미국과 한국이 다 대통령중심제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선교 의원 그런데 미국에서는 권력의 어떤 독점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대통령제인데?

○국무총리 김황식 제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

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렇다면 이 개헌 논의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회의 어떤 의무이자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개헌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분권형이다 내각제다 이런 논의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의 대통령제가 정말 그 제도와 법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것 자체가……

○**한선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우리도 대통령의 어떤 권력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총리께서 직전에 감사원장을 훌륭히 마치셨습니까다라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는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사원의 국회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업무가 크게 보면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 두 가지인데 국회로 이관될 때는 직무감찰은 권력분립상 할 수가 없어서 두 기능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대 국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은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에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직무감찰하는 기관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963년에 이 기관을 합쳐서 현행 감사원으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지방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생깁니다.

○**한선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관을 국회 소관으로 하느냐, 행정부로 하느냐, 독립기관으로 하느냐, 세계 나라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만 갖춰 준다면 어느 소속이 돼도 상관없이 없지만 그러나 국회로 완전히 이관할 때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분리 문제, 지방감사 문제,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되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쭙았습니다.

다문화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중심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문화의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고 예산상에서도 여성가족부 2009년도 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1038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이주여성 취업지원 예산 2억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예산,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여성가족부로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문화사업 주체라고 하기에는 예산적인 것 또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이 부족함이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정책의 중심이 여성가족부로 끝까지 가나오, 어떻게 되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다문화가정 문제만큼 다수 부처가 관여되는 그런 업무도 없을 겁니다. 여성가족부 그리고 출입국관리 등에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교육 관련해서 교과부 또 양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복지부, 여하튼 온갖 부처가 많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어느 특정 부로 몰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서로 각 부처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뭐 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회의에 참여해 보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회의를 하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선교 의원** 여러 부처가 다각적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라

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총리실 직속의 다문화가족처, 가칭이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처가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다문화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위원회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을 독립된 하나의 처, 총리실 산하지만 두는 것이 어떠냐,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기구,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원회의 형태로서도 노력을 하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우리나라 결혼을 하는 남성들을 기준으로 할 때 총각들 10명 중에 1명이, 10% 11%까지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농촌과 어촌의 총각들은 40%가 다문화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대 도시 외에, 그 대도시 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60%가 넘습니다. 농어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09년도 9개 부처 총 773억 5000만 원 이 가운데 법무부의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및 이민정책 개발 지원 예산 16억,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45억 2000만 원 또 이주여성농업인,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마는, 여기 4억 2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608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예산만 모으더라도 다문화처가 충분히, 다문화가족처가 총리실 산하에서 예산의 어떤 어려움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 몇 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작은 정부건 큰 정부건, 흰 쥐건 백 쥐건, 아! 고양이 지요. 쥐를 잡는 게 정말 우선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것은 그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정말 우리 다문화……

제가 오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다문화가정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 때 금년도 하반기에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리실로 넘어오니까 바로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다문화처의 신설에 대한 것도 꼭 고려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적인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 자체를 각 부처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문화가족처를 만들어 가지고 흡수를 해 버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하튼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총리 말씀을 다 이해하겠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알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받아들이겠는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명칭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다문화여성들께서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겠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년도 통계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직업 가운데 단순노무직이 22.4%, 무직이 11.7%, 직업 미상이 10.3%,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들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학교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굴 모습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우리말도 조금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조금 따돌림이 더 심할 수 있고, 하지만 얼굴 모습이 조금은 우리와, 다른 아이들과 다르더라도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그들을 능가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후 한 3살부터 6살 사이의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가정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농촌·농어촌 지역에 60%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만만한 교육기관이 있을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집중적인, 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학교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더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 취임하고 대전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주여성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하나하나 전부 해결을 해 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여성가족부로 예산보다는 기금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이 됐지만 이러한 기금을 통한 불안정한 어떤 지원보다는 우리 국가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이런 정책을 좀 펴 나가기를 그것도 제안드리고요.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제 대학교 갈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90%, 중학교 진학률은 80%, 고등학교 진학률은 60%,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통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갈 때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선교 의원 우리나라 주요 국립대학에 입학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재외국민, 외국인 등등 많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이제는 여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특례입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지금도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자율적·독자적인 기준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우리 장관께 드려야 될 질문을 총리께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정말 실천을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선교 의원 내년 이 시기에 또 한번 여기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선교 의원 그리고 유아 공교육, 정부에서 70%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선교 의원 지금 사립유치원의 현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한 3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아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포함하면 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도 좋은 정책이신데 국공립유치원, 시립유치원 이것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오래된 어떤 바람인데 알고 계시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평소에 우리 한선교 의원님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것도 실천을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산정 항목에 공립유치원 신설비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010년에 13개 유치원에 39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산정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1개 원, 6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300억 원 이 정도 가지고 가지적인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특히 문제는 서울시 같이 대도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10만 원 이하로 종일반을 보낼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선교 의원**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자리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지역별·기업 규모별 종업원 부족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대기업에는 1만 9700여 명의 부족한원이 있다고…… 혹시 통계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대기업들 인력 부족률이 한 1.7%, 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이 한 3.8% 해서 전체 100인 이상에서 한 28만 명 정도 빈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예산의 약 38.4%에 달하는 574억 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3.7%인 53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한선교 의원** 불용이라는 것은 부처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때문에 큰불이 나 가지고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몰라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소 저희들이 좀 과도할 정도의 추경예산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예

상보다는 많이 살아났고, 그래서 보험금을 다 지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 세계 어떤 전문가구나 국제기관에서도 예측은 못했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산대로 그냥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충정도 좀 들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부 일자리 창출에서 늘 수십 조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만들고 뒤로 없어지는, 겉으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뒤로는 없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소위 인턴, 청년인턴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가 많이 고용을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행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턴은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지 하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인턴을 한 사람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썼던 교육지책이었거든요.

그러나 중소기업 인턴의 경우에는 끝까지 마치는 비율이 67%, 마치고 나서 채용되는 비율이 84%,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래서 제 말씀은 정부 부처에서 인턴직원을 해야 정규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은 그 자질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한선교 의원** 그쪽에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7900억, 중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2조 6245억, 노년층 일자리에

1656억, 물론 중년층이 자식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꼭 필요한 계층이지만 이제는 이 배분이 노년층으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지금 이른바 저희들이 노년층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주된 근로계층이 남성 중년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는데 이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점진적 은퇴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방통위원장 자리해 주시지요.

우리 상임위 관련부처라서 한번 모셨습니다.

종편 선정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과연 이게 올해 안으로 일정이 소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어제 그제까지 기본계획을, 심사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문제 출제를, 기본 출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가능한 금년 말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대로 가시겠다는 표현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제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진인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실까요?

2010년 현재 8개 부처 총 39개 바우처 제도가 운영 중이고 2010년 총 예산 3조 3571억 원에 이게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2%에 달하는 수치인데 다 좋은 일이지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부처의 고유업무임에도 바우처로 넘어간 경우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39개 바우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

것을 꼭 이 분야가 아니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쓰지 못하는 것이 절반 이상 되는 제도의 불안정함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선교 의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용자가 보다 재량권을 가지고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그 제도를 이용했다 하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하기 보다는 크게 좀 나눠서 또 바우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EBS 무슨 그걸 듣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바우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한 바우처 갖고 같은 분야에 한 4개 분야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실제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 큰 문화적인 혜택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적인 혜택이 되고.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39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각 부처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바우처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깐 그것을 전부 울타리를 더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쓰면 또 고유의, 부처의 고유목적은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좀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함께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바우처 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복권 쪽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권도 있고 로또도 있고 경륜·경마도 있고 경정도 있고…… 사감위, 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선교 의원** 왜 그것이 태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한선교 의원** 바다이야기, 불법 사행성게임의 근절을 위해서 냈는데 실제 사감위가 그런 일은 잘 안 하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스포츠토토라든지 이런 중독성이 아주 현저히 낮은, 로또보다도 더 낮은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총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바다가야기 같은 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경마·경정·경륜 또 지금 스포츠토토 등등 이것도 말하자면 국민의 레저생활을 위해서 합리적인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야 되겠지만 또 그 자체로서 도박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출 총량제를 뒤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취지는 스포츠 토토의 경우는 거기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 어떠한 그런 취지인데, 다른 분야하고 비교할 때 과연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균형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하고 어느 정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과연 분리해서 떼어 놓아도 괜찮은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올해에 꼭 좀, 왜냐하면 거기서 총량제만 풀어주면 우리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쓸 수 있는 기금이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앞으로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방청석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다문화정책 50년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 앉아 계신 다문화여성들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한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을 출신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을 민주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범죄에 활용되고 또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셨단 말이지요. 지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때 포괄적으로 대포폰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포폰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차용해서 사는……

○**주승용 의원** 어찌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폰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하고 청와대나 총리 위상이 떨어지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을 실패한 수사라고 국정감사 때 했고, 장관도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면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여당의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압수수색이 약간 늦은 관계로 증거가 인멸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 BH 보고 등 그런 의혹 문건들은 전부 검찰에서 다 입수해서 조사를 다 거친 것이고, 현재 법원에 다 제출되어 있는 문건들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조사했지만 더 이상 기소할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한 것이고, 기소할만한 것은 전부 기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국민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이 5억 원을 수수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내에 있으면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했는데, 검찰에서 과연 이백순 행장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주승용 의원** 라웅찬 회장 출국금지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출국금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신 사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라웅찬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라웅찬 회장이 수시로 외국을 나가는데 만약 입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지난 11월 2일 신한은행 회장실·사장실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주승용 의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두 달이나 지났는데 두 달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주승용 의원** 라웅찬 회장이 16층에서 18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후에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라웅찬 회장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주승용 의원** 공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일단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과잉복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상수 대표가 70% 복지를 주장했는데요. 70% 복지하고 과잉복지하고 무엇이 다른지? 거의 비슷하지요, 의미는?

○**국무총리 김황식** 복지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문별로 70% 정도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 부분이 있을 거고요, 100% 다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 30%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주승용 의원** 소위 상류 30%는 지하철도 돈 내고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위 상류 30%는 급식도 돈 내고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70% 복지입니다.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과잉복지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 많이 낳아 가지고 본인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된 것 나는 그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인정합니다.

○**주승용 의원** 예,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그분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줘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경로당 연료비도 우리가 못 대 주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기도 하고 또 면제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은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먹고 돈 내고 타고, 어떤 사람은 돈 안 내고 타고 돈 안 내고 먹고, 이것은 상당히 눈치가 보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 차별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주 의원님 생각이거나 제 생각이거나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복지를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잘 검토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로 적용할 분야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비율을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승용 의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승차비를 걷어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충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하철 그것을 새삼스레 다시 제도를 바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주승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주승용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75조 원을 투입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재원조달 방법은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충실히 반영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렇습니다. 충실히 편성하겠다는데, 제가 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아 했더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해서 반영하겠다는, ‘우선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내년도 예산이 309조입니다.

○**주승용 의원** 아니,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예산.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5년간 75조니까요, 14조 정도 됩니까?

○**주승용 의원** 사교육비 대책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교육비는 교과부에서……

○**주승용 의원** 지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대책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직접 포함시키지 않았고 다만 그 취지 정신을 받아 가지고 교과부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봤더니,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앞으로 15년 후입니다. 저는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가 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 15년 후에 혜택받으려고 둘째 아이 출산하

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비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광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다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쪽 방면으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지금 국공립 경우에 전국 평균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나마 230개 지자체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전국에 열한 곳입니다. 그중에서 전남은 열한 곳 중에서 여섯 곳이나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데 재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적어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가지고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건비가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건비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을 전부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우리 당에서 노력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해 줬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아직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11개 시군, 농어촌 지역부터 빨리 확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를 해 줘도

4분의 1 정도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3을 그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내려와도 시설을 못 합니다.

저는 이런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런 지역부터 국가가 차별적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 말한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용 의원 아니 총리님,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지원을 해도, 국고보조를 해 줘도 나머지, 매칭펀드 지자체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납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데는 차별적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공감합니다.

○주승용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분권교부세사업 좀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쳐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분권교부세 2004년에는 6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작년에 8628억 원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도에 6845억 원이던 것이 작년에 1조 8355억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1조 1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지자체 부담액 증가액이 분권교부세 증가한 것보다 4배나 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자체에서 부담할 매칭펀드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경로당 연료비, 노인들 연료비도 안 해 주고 싶

어서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때문에 교부세도 낮아지고 또 중부세로 인해서 낮아지고 지방재정수입이 적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방세도 수입이 줄어들고 물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제도를 설비한다든지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지방재정이 근래에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또 그런 사정들이 그렇게 지방재정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재정도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복지사업 확대에는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승용 의원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재정 보고 참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재정은 더 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데……

○주승용 의원 지방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 살림규모를 줄여서 그 기회를 극복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면 원래로 돌아가고 더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겠는가……

○주승용 의원 복지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2008년도에 감사원이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운영실태를 감사를 했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때 감사원장님 하기 직전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이 세 가지는 다시 국고보

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 조정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런데 왜 시행 안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지금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주승용 의원 환원하라고……

○국무총리 김황식 지방 이양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환원해 가라……

○주승용 의원 맞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주승용 의원 예,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양사업이 적절한지,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취지 그리고 분권교부세 운용 실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67개 복지사업 중에서 24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오히려 총리실에서 무시하고 있고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 오히려 중앙으로 환원해 놓고 중앙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 물어봤더니 정부는 사업구조조정을, 지방에 내려 보내 놓은 6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조조정을 한 뒤에 나중에 정부로 환원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정부로 환원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필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방법론의 차이 같은데요. 여하튼 그것은 국가재정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 또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사업으로 해서 환원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경제상황 등 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런데 매나 ‘재정’ ‘재정’ 이야기 하는데,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원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정이 뒷받침……

○주승용 의원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어떻게 복지를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까?

○주승용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분권교부세 증가율하고 지방 매칭펀드 부담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것은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한 2년 동안에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승용 의원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증가한 것 아닙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단체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복지가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모든 점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앞서서 가고 또 한쪽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게 그런 것들이 잘 조화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확대되고 증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에 합당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주승용 의원 분권교부세 늘려 주지 않으시려면 빨리 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감사원 결과대로.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세 가지 이 사업은 감사원 결과도 환원하거나 교부세를 증가해라 이렇게 보냈으니까……

○주승용 의원 그러면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무시해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보훈사업은 국가가 해야 됩니까,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는 국가사무이지요.

○주승용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지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3만 원씩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개 자치구가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5만 원, 화성 3만 원, 여주 2만 원, 안산 1만 원, 수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그렇게 안 해도 지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지자체보고 저렇게 감당하라면 되겠습니까? 바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여수세계박람회 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여수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가 봤습니다.

○주승용 의원 아니, 세계박람회 현장에?

○국무총리 김황식 이번 달에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수세계박람회 예산도 같이 감액되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엑스포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2012년 5월 안에는 다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시면 SOC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여수는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SOC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접근하기 위한 국도에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국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꼭 해야 되겠다는 열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세계박람회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여수 시내에 있는 시가지 도로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KTX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에 왔는데 여수의 시내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버리면 수조 원 투자한, 수천 억 투자한 고속도로 타고 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는 ‘여수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93년도 대전박람회 때는 전부 다 대전시가 해야 될 도로도 국가에서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대전하고 여수하고는 재정자립도도 다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리고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국을 1시간 30분대 철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오송-광주 간 호남고속철도 2014년 완공에 차질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지금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한 10조 원 넘게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1조 6000억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에 끝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하여튼 지금 초기 단계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내년, 내후년 해가 갈수록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여하튼 2014년까지는 KTX를 광주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책임지십시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그리고 전라선 전철복선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박람회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내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고 설계속도가 150k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고속화사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화사업은 최고 설계속도가 200km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라선 복선화사업 150km로 하고 있는 것을 200km 고속화사업을 겸한다면, 또 지금 150km로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또 고속화사업을 한다면 예산도 216억이 더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 시간도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선 전철복선화사업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고속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추진해 버린다면 그러면 시간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승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

전동휠체어가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5년 동안 3만 건을 지급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모두 바꾸어줘야 됩니다. 바꾸어줘야 되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정부가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한 45%는 지금 전동휠체어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년에는 전동휠체어 대란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현재 모든 지체 장애인 분이나 뇌병변장애인 분들에게는 수동휠체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행이 어렵고 또 팔에 힘이 없는 장애인 분들께서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신 장애인 분들인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절반 가까이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주승용 의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주승용 의원 그것도 복지부 지원실적이 42건 뿐이 안 돼요.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휠체어 같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의 실적을 보아가면서 또 시각장애인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보이스아이하고 아까 전동휠체어 문제는 장애인들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도운다는 입장에서 복지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보다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이춘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춘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18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네 번의 정기국회 중에서 세 번째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위에서 남은 임기 동안 70%인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마는 3년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또 이렇게 준엄한 명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습니다.

또한 올해는 100년 전 나라를 잃었던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짓는 역할을 맡게 된 지구촌 리더그룹으로 우뚝 서게 된 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리를 울어도 출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서민정책을 기획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총리 및 국무위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슬피 울어도 아픔을 함께하려는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6~7% 성장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늘 흑자를 내고 외환보유액도 30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복지국가입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께서는 복지총리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영어로 복지는 웰페어(welfare)라고 합니다. 웰페어는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즉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지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는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다섯 가지를 척결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총리 이하 정부 각료들이 복지를 입으로만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서민들과 아픔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총리라는 자세로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서민생활에 32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복지예산은 금년도보다 5조 이상 증가한 86조 3000억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체 예산의 27.9%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1.19,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출산과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출산과업을 하느냐?

보육, 사교육비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안되고 주택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출산과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보육하고 사교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하고 달리 보육 대책만 가지고는 출산 해결 안 됩니다. 프랑스는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의 저출산 원인이 대부분이 사교육비가 월 50만원, 100만원 또 그 이상, 평균 1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몰라도 두 사람 낳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에게 필수예방접종,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것을 국가에서 무료로 놔 주고 아기를 낳으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예방접종도 안 해 주고 아기를 낳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힘 없는 복지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많은 부처들이 참여해야 되고, 특히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리실에다가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범정부적인 모든 추진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수시로 여러 가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특별한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 만들어져 있는 틀 속에서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춘식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57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103만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춘식 의원**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130%,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130%라는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77만 원이거든요. 4인 가족이 177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부모를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본인하고 배우자만 소득이 없고 대상이 되면 해 주지, 부양의무자 규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또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70% 이상이 빈곤 노인은 정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연구원에서도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103만 명이 수급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 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받는 그런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국가 재정 여건과 또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담 또는 국가 부담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각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지,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관계는 지금 국민들이 모두 정부와 사회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내의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가족 자체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부양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사회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우리 전통이나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생각들이 옳은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춘식 의원** 이것을 가족은 국가에 떠넘기고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그리고 이 법이 1999년에 제정될 때는 가족이 형제도 부양의무자가 됐고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2006년, 7년에 부양의무자를 직계가족 1촌으로 제한하고 130%로 올렸어요. 그리고 친서민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완화해서 최소한 200%, 월 소득이 272만 원입니다. 272만 원 정도는 되어야 본인들이 생활하고 좀 부모도 모실 수 있지 친서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것을 좀 200%로 완화는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이지만 여하튼 자기가 생활이 되면서 부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이춘식 의원** 안 되는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72만 원, 4인 가족 이것을 좀……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이것은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령임금, 기초생활수급 등 해서 정부에서 직접 공적부조로 집행되는 예산이 14조, 15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전달체계가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만 만들고 집행은 시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복지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또 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전문성도 없고 또 지금 작년도 불용예산이 38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행정의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복지청을 만들어서 정말 복지 마인드가 있고…… 복지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지 앞으로 많은 복지수요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원체제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청 신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할 때는 연 한 5조 700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하

고 또 부처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한두 개 부처가 아니고 또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키우고 신설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행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통합망을 구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독립된 청의 문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꼭 필요한 기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인데 대북 협상 부서인 통일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관계가 민감해질 때 협상용으로 탈북자들이 전략될 이런 소지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이 넘었고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행안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2만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꺼안지 못하면서 통일 후 24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꺼안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게 되면 거지나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거나 제3국으로 떠난다, 남한에서 못 산다, 이렇게 정말 선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따뜻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 부서를 행안부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만 그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지금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그런 의원님의 지적의 문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그리고 입국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예,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88년 시작할 때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 60%, 2008년도 50% 그리고 또 매년 줄어서 40%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설립 기본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최저생계비 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돈으로 전락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무슨 연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를 국민 소득대체율 50% 이상은 유지해야 국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2, 30년 부어서 내가 얼마 정도 탈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전부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도 내가 30년 부어서 저것 40% 저래 받아 가지고는 뭘 넣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 급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50%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춘식 의원** 이것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춘식 의원** 다음, 교육과학부장관님.

최근에 청문회 등에서 보면 논문 표절, 이중 게재, 중복 게재 말썬이 많습니다. 논문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을 관례라고 넘어가는 운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어 도중 하차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위반하면 이렇고 이런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좋겠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준을 다 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좀 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 중요한 지적 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과부에서는 2007년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훈령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시켜서 그런 규칙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이 21조다, 실체는 40조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는데 이런 교육을 교과부가 제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크게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사교육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시에 따른 사교육 유발입니다. 아무래도 사교육을 학생들이 할 때 입시 준비를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근본적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 입시의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사교육 유발 요소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단순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지금 평이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서 장기적으로 점수 경쟁이 아니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뽑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시의 변화를 통해서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책무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원평가를 한다든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한다든지 또 교장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 내용이 주입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교육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교사 분들이 평가를 할 때도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업 방식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창의성과 인성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의 그런 제도를 많이 강화를 해서 사교육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창의성·인성 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인데요.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학원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사교육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고요, 올해는 학원 매출지수가 6개월째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교육 감소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고 아마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학부모님들의 피부에도 와 닿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그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서열화되어 있어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도 평준화로 되어야 만이 이 사교육

이 없어지지, 대학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해 놓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며칠 전 조선일보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 자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15년 전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15년이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 해결은 저출산하고도 정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 평준화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대학들 간에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많이 촉발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교육이 유발된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의 질적 수준을 고르게 가져가는 방식에서 평준화라는,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대학의 질을 규제하다 보면 소위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대학들의 하나하나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해서 특성화를 각각 유도하고 지원해서 하나하나의 대학들이 다 경쟁력을 갖추고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대학은 지방산업과 연계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고 또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좀 골고루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의 좋은 기회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존경하는 이춘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교육 만족은 두 배, 사교육비는 절반이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무면허 운전자의 과속 스캔들로 학교 교육 불만 극치, 사교육비 한숨 극치라는 절망의 터널로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81%의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현실이 후퇴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서 교육정책을 내놓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교육 목표가 오로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영어유치원이 활개를 칩니다. 학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사립초등학교에 뒷돈까지 주고 입학시킵니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세 배나 더 내야 하는 자사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실이 이 정부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공정사회입니까?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대포폰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대포폰 불법행위 수사를 반대하고 깃털수사만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노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과 대포폰 수사를 조율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포폰 관련하여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 민정수석 해임을 건의하실 것과 둘째, 법무부장관께 중앙지검장 경질을 요청

하십시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해임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3대 거짓말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째,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실현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안민석 의원 실현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실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둘째, 지난해 대통령께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게 해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상환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현실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상당한 뒷받침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세 번째 거짓말은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실행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금년 예산에는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고, 2011년도 예산에는 10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올해 예산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할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취업후학자금상환제 ICL 현행 이자율이 5.2%입니다. 3% 이하로 낮출 의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특성상 이자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8%에서 5.2%로 낮췄던 것처럼 금리인하 노력을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래서 대학등록금 관련한 세 가지 거짓말 시리즈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게 해 주겠다,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원하겠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정부로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것을 정부가 사과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총리께서 노인의 지하철요금 무료, 버스요금 무료정책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 상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민석 의원** 예,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나 하는 큰 원리적인 이런 논의나 이론적인 그런 차원보다는요, 제한된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고민의 일단을 피력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당연히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부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맞고, 그러니까 모든 복지 분야를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할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는 복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제가 좌파적인 발상이다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말하자면 부분적인……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이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무상급식정책을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총리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자급식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유 있는 사람 것을 아껴서 필요한 다른 교육 부분에, 어려운 쪽에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입니다.

○**안민석 의원** 총리의 생각과 정부 여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 주십시오.

자, 무상급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급식 문제는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안민석 의원** 그러면 국회에 올라 와 있는 무상급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총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은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진정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제 입장을……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이 국민적인 논란이고 국회에서도 아주 대단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아직도 총리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셨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제 입장은……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을 법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입장이 없으시다, 이것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무상급식은 적어도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무상으로 급식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아껴서 다른 데 정작 필요한 데다가 교육 관련해서 쓰자 하는 취지고요.

다만 무상급식, 유상급식을 병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혹시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이 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문제, 그런 부작용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통장계좌에다가 해당 금액 만큼 넣어 줘서 자기가 몇몇하게 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총리는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무상급식정책을 이념으로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나갈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우리 교과부

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 인원이 13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해서 특히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모두 다 무상급식으로 하고 도시의 학생의 경우에도 차차상위까지 해서 한 200만 정도 수준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 교과부에서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내년부터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각 시도별로 준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시도의 사항들은 자료를 지금 여기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잘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1조 10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라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다는 급식 부분은 2005년도부터 지금 지방교육청으로 위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지방비, 지역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우리 교과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200만 수준까지 가는 그 정도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희 교과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규모로 가는 것은 우리 교육예산이 다른 데 시급한 예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내년에 무상급식을 지출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지자체가 큰 무리 없이 이런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장려하시겠습니까, 묵인하시겠습니까, 막아내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자체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학교 차원의 자치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 특히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쓰여질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이야기를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이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적어도 교육 문제는 저는 당리당략이나 또 정략적인 차원이나 또 이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사립학교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1656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방지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금 문제와 이 부분을 결부시키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 검토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바로 지금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대법관 시절에 상지대를 구 비리 재단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구 재단에 돌려주라는 취지가 판결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 판결요지를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그때 쟁점이 됐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상지대학이 문제가 있어서 임시이사가 파견돼 가지고 재단이 운영되었는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 재단 측 인사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그러한 조치는 무효다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임시이사는 아시다시피 사학법상 그야말로 사학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자로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시이사가 학교의 경영주체, 주인을 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법률상으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판결의 첫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위 법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아무라도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때 구 재단 측 인사는 학교 설립 내지는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이사는 선임의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안민석 의원** 그 판결이 상지대 구 비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면 임시이사체제로 되어 있는 학교가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정이사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학교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국회 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립학교를, 분규 있는 사립학교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이사를, 정이사를 어떻게 그러면 선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를 해 가지고 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그 길을 터 줬다 하는 것 보다는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국회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사분위에서는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구 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걱정한 이사를, 정이사를 선임해서 그 사학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와 관련한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사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심의 기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그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고 또 설사 제 견해하고 다르더라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안민석 의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학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민석 의원** 이것을 안 지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대부분의 대학에 대해서 평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10% 미만의 대학에서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전국 사립대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큰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조……

○**안민석 의원** 10조가 됩니다, 10조.

○**국무총리 김황식** 10조……

○**안민석 의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사립대가 쌓아 두는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해당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장래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겠지요.

○**안민석 의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의 관련 사항은 일응은 자율성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

○**안민석 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쓰여지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저희는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은 이제 그런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학의 재정 자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력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예·결산 내역을 공개를 시키고 공시를 한다든지 또 교비 회계와 적립금 회계를 분리를 하는 회계규칙을 개정하는 등 사립학교로 하여금 적립금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이런 방향에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민석 의원** 대학이 예산 구조에 맞게끔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장래를 대비한 적립금이라면 몰라도 그냥 무작정 쌓아 놓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교장을 할 수가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것 혹시 교과부가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아직은 안 했지요?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안민석 의원** 자, 승인받지 않고 위법인 학교 수가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서울만 하더라도 22개의 사립학교에서 미승인 위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을 왜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학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당은 사학에 자율성을 더 주어야 한다고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학법의 경우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통해서 개정이 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 그 논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합니까, 동의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어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자, 장관은 17대 의원 시절에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안민석 의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사들의 경우에는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적어도 우리 후원금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다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썽요, 제가 의원

실을 운영할 때 그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안민석 의원** 맹세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교사들에게 후원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적어도 제가 후원금 담당 책임자에게는 돌려주도록 지시를 했고, 실제로 돌려준 사례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맹세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민석 의원** 후원금 결백하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시절에 후원금, 교사의 후원금인 경우에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자, 만약에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이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썽요, 그게 지금 의원실 관리라는 걸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까만……

○**안민석 의원** 후원금 냈다고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니까 장관이 이런 사실이 있다면 장관이 장관직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성추행한 교사나 뇌물 받은 교사들도 해임이나 파면 안 시킨 경우도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우리 교과부에서는 5대 중징계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더욱 지금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쪽 징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난 10월 21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 전국시·도 교육감회의 자료에는 배제징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제징계에 대해서 설

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배제징계는 해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해임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엇을 말씀입니까?

○**안민석 의원** 10월 21일 그 회의에서 배제징계를 지시하신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 10월 이십며칠쯤 한 그 회의의 경우에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설동근 차관께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의 주요한 의제들은 그 당시의 현안들이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안민석 의원** 교사의 징계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까, 시·도교육감에게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사에 대한 인사권한은 교육청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안민석 의원** 자, 그러면 배제징계를 지시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월권행위이고 법 위반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임된, 교육감님들에게 위임한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래서 배제징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시가 아니고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9일 각 시·도교육청, 9개 교육청에서 일제히 교사 징계를 했습니다. 후원금 냈다고 또 정당가입 했다고. 어떻게 한낱한시에 이렇게 우연히도 징계가 가능했겠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아니, 제가 미리 질의서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서……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질문 취지가 한낱한시에 징계가 이루어졌느냐?

○**안민석 의원** 예.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9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지요. 아까 교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으니까 시·도부교육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제징계의 기준을 협의를 해서 제시를 했다 이런 취지에 보면……

○**안민석 의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거짓말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한낱한시에 모두 모여서 다 징계를 해라 뭐 이런 취지보다도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용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적어도 형평성 있게 징계가 징계절차가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하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징계수위는 원칙적으로 배제징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기준을 정해서 권고를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제한적으로 최소한 허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교사들의 정치활동 특히 정당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생긴 이 문제 이전에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정당 가입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치활동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을망정 우선 당장은 실정법 체계가 정당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징계 기준을 제시를 한 것도 과거에 이루어졌던 관례, 선례에 비추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안민석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사교육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PPT 한번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민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소위 사교육시장 하면 입시학원, 보습학원 이와 같은 기존 시설, 소위 학원가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중소기업 상인들 영업 영역에 SSM이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견지에서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이 어떤 형태로 사교육에 들어가겠다 하는 취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자금이,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 특별한 그런 분야가 아닌 이상은 대기업이 종전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원가, 영세 학원가에 영향을 주는 데 같이 끼어든다는 것은 그건 절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SSM 때문에 서민과 골목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 학원가의 SSM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교과부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재외 한국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서서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어느 총리도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민석 의원** 지난 2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국내 거주자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민석 의원**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재외국민들이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우리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안민석 의원** 법령 근거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헷수는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99년부터 중학교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자 그게 근본적인 법의 취지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민석 의원** 재외국민도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시하려면 약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외국민이, 지금 재외동포가 700만……

○**안민석 의원** 학비만, 학비만.

○**국무총리 김황식** 700만이고 또 우리 재외……

○**안민석 의원** 해외 한국학교가 세계에 30개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정확히 모릅니다.

○**안민석 의원** 260억 원입니다. 260억 원만 지원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등록금 지원 검토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우선 더 근본적으로 챙겨져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김성곤 의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열악한 학교 시설이라든지 또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또 등록금……

○**안민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난번에 김성곤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사카 학교 그리고 칭타오 학교

에 대해서 제가 전향적인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안민석 의원**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재외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시설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교육기능 지원을 통합해서 재외국민 교육지원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잘 챙겨도 되는 정도지 따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총리님,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학교용지매입비를 미납한 곳이 어디입니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경기도네요.

○**안민석 의원** 알고 계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몰랐습니다.

○**안민석 의원** 시도에서 이렇게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시도에서 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특별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렇게 무책임하신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총리님, 공부 좀 하십시오.

내야 한다는 법령해석만 있었습니까, 내야 한다는 해석만 있었어요.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하여튼 학교용지 부담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향후에는 부담 규모가 대폭 감소되고 미납액에 대한 상환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에 연차적인 상환 계획

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부자만 용되게 하고 개천에서 용 대신에 욕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온데간데없고 맹목적인 지식의 무한경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창의적 인간교육은 뒷전이고 성적으로 학교를 줄 세우고 관리자를 줄 세워서 권력에 순응하는 온순한 양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가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다량이 논처럼 겹겹이 쌓여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을 편 가르기 하고 정치에 이용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책 없이 맡겨 놓는다면 과속과 감속을 구분하지 못해서 회복 불가능한 식물교육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을 살려내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고 교육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 교사가 보람 있는 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당이 만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보험이 통합돼서 건강보험법이나 또 의약분업이나 또 국민

연금의 전 국민 확대 실시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법과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이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님께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점검반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심도 깊은 조사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에도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진갑 출신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갑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서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국민들께 한번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패널에 있는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BS PD께서도 이 날짜를 좀더 잘 보이게끔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어떤 날짜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날로그 TV 방송이 중단되고, 종료가 되고 디지털 TV 방송이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한 50% 정도 맞추신 것 같습니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아날로그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이 100% 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허원제 의원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전문가시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허원제 의원 방통위원장과 대화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잠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 날이 되면, 방통위원장께서 국민들에게 이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하는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법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전면적으로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어서 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제 디지털방송으로 전과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기를 가진 분은 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컨버터 같은 보조기기의 전환 없이는 방송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종래의 화질보다도 5배 혹은 6배 높은 좋은 화질로 국민들에게 전과가 전달된다는 새로운 문화의 전기의 계기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허원제 의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방통위원장께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건 아마 디지털방송이 된다는 인지율인 것 같습니다.

○허원제 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2.8%, 우리 국민 10명 중에 지금 불과 6명 정도가 2012년 12월 31일 날 디지털이 100%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5000만 인구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직 2000만 인구가 디지털 전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 허원제 의원**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같은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하는 영국, 일본…… 영국 지금 이미 90% 인지율을 갖고 있고, 일본 99.7%의 인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쯤……
- 허원제 의원** 우리 지금 불과 62.8%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정부는 정부대로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2011년, 2012년, 그 시간을 거치면 98% 정도의 인지율에, 디지털 보급률 95%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원제 의원** 사실 지금 불과 2년이라고 하는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KBS에서 지금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고맙습니다.
- 허원제 의원** 지금 경북 울진을 비롯해서 3개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 허원제 의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디지털방송의 전환을 울진, 강진 지역에 모두 했는데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혹은 장애인 가구에게 미쳐 제대로 못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숫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울진의 경우는 미진행된 가구가 236가구고, 강진의 경우는 167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직접수신 가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타났고, 디지털 전환 후에도 저희들이 무료로 보급된 컨버터를 제대로 설치할 줄 모르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안내해 드리고, 또 채널을 만지는 것도 서툰 분들은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수정해 드리고 그래서 거의 기술적 지원이 요청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통해서 거의 100% 가까운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 허원제 의원** 좀 복잡하게 말씀하셨습니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짐작합니다.

○**허원제 의원** 뭘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리나라가 1900만 가구로 본다면 현재 직접수신 가구를 한 10%로 봅니다. 그중에서 울진과 강진에서 경험한 수치에 따라서 완전히 디지털화됐을 때 직접수신 가구가 디지털화되지 못한 그런 예상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원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시범지역에서 나온 수치대로 거기에 비춰서 본다면 지금 직접수신 가구가 전체 1900만 가구 중에 한 10% 정도 잡고 190만 가구가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허원제 의원** 그중에 23%에서 많게는 29%까지 지금 수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최대 55만 가구까지 2012년 12월 31일 날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물론 우리가 앞으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홍보하고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를 잘 해 나간다면 그 수치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앞으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대로 빨리 디지털 TV를 구입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디지털 컨버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디지털 TV를 매입할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1가구당 10만 원씩 보조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값싼 디지털 TV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2012년에 홍보와 기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는 2012년 봄에 총선거가 있고, 2012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중간 여

름에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세 정치적, 혹은 스포츠의 대체전이 있기 때문에 2012년의 경우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디지털화될 수 있는 시기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기기를 어떻게 하면 보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2011년까지 못다 했을 경우에는 2012년에는 꼭 디지털화를 인식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정부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2013년 1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전개, 새로운 선진국가, 복지국가의 디딤돌이 되는 해가 되도록, 날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원제 의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케이블 TV를 수신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반드시 디지털 케이블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 셋톱박스를 바꾸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 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원제 의원** 오늘 우리 방통위원장께서는 오늘 본전 다 찾으셨습니다. 수익 원의 방송광고를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허 의원과 국회에 대해서 특별히 광고료를 내도 될 것 같은 고마운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허원제 의원** 본 의원으로서 오늘 새삼스럽게 우리 이 현장을 생중계해 주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그 소중한 가치를 또다시 느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내친김에 제가 KBS 수신료 정상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KBS 수신료가 지금 월 2500원인데 이게 지금 29년간 묶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우리 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KBS 수신료의 인상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사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직접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가지고 보다 더 성숙된 선진사회, 보다 더 성숙된 복지사회로 가는데 우리 KB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새기셔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원제 의원** 이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을 광고로부터, 나아가서 광고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 KBS는 40%가 광고 재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영국과 일본 다 광고 재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13%의 광고 재원이 있지만 프랑스도 2011년이면 광고 재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시발점은 KBS 이사회에서 시작을 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금 KBS 이사회를 중심으로 아마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감사합니다.

○**허원제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이게 보면 우리 국가가 합법적으로 지금 이 사행산업을 허용하고 있는 종류가 지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다가 소싸움까지 지금 이제, 경우까지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사설 스크린 경마, 불법 온라인게임, 카지노 바 해서, 불법적인 사행산업까지 해서 우리 온 사회가 지금 아주 도박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 중에 장외발매소라는 것 총리,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허원제 의원** 그 실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까, 몇 군데나 있는지?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합법적으로는 68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경마가 서른 둘, 경륜 스물한 곳, 경정 열다섯 곳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현장 그림을 한번 잠시 보시지요.

여기가 의정부, 시흥, 또 서울에 있는 논현동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대도심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 상가 아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누가 출입을 하겠습니까? 바로 가정주부, 뭐 우리 이웃에 있는 가족들이 다 사실 출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통제를 해서 도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제 의원** 최근에 방송에서 일부 고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주부가 거기에 아기를 안고 와 가지고 아기를 바닥에, 땅바닥에 뉘여 두고 그 도박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까지, 또 한 번에 10만 원, 또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가정 파괴의 하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문제점을 좀 간파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건진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을 해서 원칙적으로 장외발매소는 이제 신설을 불허하고, 또 기왕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레저문화의 활용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본적으로 통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원제 의원** 지금 장외발매소에서 팔려나가는 권이 80%가 넘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이것은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본장에서 20%, 장외에서 80%.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장외발매소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1년에 돈을 얼마나

버시는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합법적인 장외발매소에서요?

○**허원제 의원** 예, 장외발매소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국무총리 김황식**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4000억 정도 됩니다. 경마를 통해서 한 3000억을 벌고, 경륜 700억, 그리고 경정 300억 이렇게 해서 4000억 버는데 이 4000억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사업, 청소년 지원, 스포츠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가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문화사업을 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래 합법적인 사업 자체는 건전한 레저문화하고 관련된 사업인 만큼 일응은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마당에 결과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문제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허원제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도 제가 불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허원제 의원** 제가 불 때는 오히려 오전에 한 선교 의원이 제의한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토도와 같은 경우는 중독에 대한 유병률이 장외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장외에서 한 80% 정도의 유병률이 있다고 하면 스포츠토도는 35% 정도의 유병률입니다. 오히려 이쪽의 포션을 늘리고 장외발매소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신설은 일단 불허하고 그것을 또……

○**허원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도 단계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신설은 불허하고 그것을 개수하거나 옮길 때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되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당장 없애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생긴 소득을 가지고 보조를 했던 각종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당한 경과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원제 의원** 어쨌든 이것을 건전화시킨다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없앤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되 오히려 스포츠도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재원이 만약 부족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낮고 기존에 있는 장외발매소는 없애는 것이 온당하다, 정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가야 된다…… 신설은 물론 안 되지요. 지금 있는 것도 단계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알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뵙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허원제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에 문화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격차를 좀 메우고 여건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제 의원** 장관께서 지금 4대 중점과제 또 15대 세부과제 해서 계층 간,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계획 네 가지 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허원제 의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국립시설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또 서울에 집중이 되고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만 지방 한 곳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국립시설은 앞으로 서울에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립시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가 꼭 주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을 할 텐데 그것은 지역에 맞춰서 특히 지역에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계획, 연구용역,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만약 국립시설을 한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국립시설이라는 것은 100% 국비로 짓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허원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 집중된다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92%입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부익부빈익빈 현상, 우리 국가의 균형 발전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또 문화예술극장 이런 아주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제2 도시인 부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런던필이라든지 또 비엔나필,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서울에서만 공연 한두 차례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공연할 장소가 없습니다. 적어도 2000석 이상 규모가 되어야 상업적으로나 이런 것이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연단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한 공연장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그리고 중앙청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광주에 2014년에 아시아문화의전당이 건립되면 거기도 2000석이 넘지요. 그런데 부산에 2000석 규모의 공연장 하나 없다

는 것은 이것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아직 지역 차별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동안에 여러 여건이나 또는 어떤 우선순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부산뿐 아니라 제가 지역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립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정말 그것은 국회의 엄청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지방자치의 어떤 자치적인 의사 결정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오히려 더, 저도 문제 제기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지역에도 어느 정도 순서가 있겠지요. 부산이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내년부터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저희가 작년에 각 지자체별로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에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공연장 그 외에 체육시설까지 전부 다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지역에 더 보충하고, 특히 시군에 갈수록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제가 왜 부산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산은 동남권의 중심이고 동남권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인구가 400만입니다. 그렇다면 제2 도시인 부산에 그런 2000석 규모를 하나 짓는 것이 순서상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허원제 의원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고맙습니다.

○허원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대로 2012년 12월 31일,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선진국가는 문화국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의 향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의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의화 마지막 코멘트 부분이 중요한데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방송에 안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원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허원제 의원님 덕분에 2012년 12월 31일 날 디지털화가 10%는 인지가 더 높아졌겠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50만 장애인 동지 여러분!

100만 산업재해근로자 가족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총리께서는 과거에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도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면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지금부터 동영상 좀 오래 보셔야 되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정하균 의원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지요.

(14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정하균 의원 총리!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하균 의원 이 화면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무척 지루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정하균 의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이렇게 지루한 영상을 틀어 놓은 의도를 납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동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일부분은 고속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한 층 내려가는 데에만 15분 37초가 걸리는 이 지루함을 총리께서는 이번 단 한 번의 체험, 그것도 간접체험으로 끝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장애인도 매일매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틀어드린 겁니다.

매몰된 칠레의 광부들은 지하 622m에서 올라오는 데 불과 1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한 층 올라가는 데 매일 그만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4명의 장애인이 동행을 해서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리프트에 한 사람씩밖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댔든 리프트가 댔든 오르내릴 수단 있다면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1분도 안 걸려 올라올 수 있는 거리를 장애인은 15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평등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리프트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께서 실시간에 가까운 이 영상을 보면서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휠체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많은 부적절함과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 현장에서 쓰이는 슬로건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즉 ‘장애인을 빼놓고 장애인에 관한 결정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도 이와 같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모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리에게 이 지루한 간접체험을 하시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정책이나 또 제도적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지루한 것을 틀었다는 것을……

○국무총리 김황식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정하균 의원 다시 한번 총리께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이 질의한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를 할 건데 다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면질의를 보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알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하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3분 더 드렸는데 더 쓰셔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동구 출신 안효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

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존경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것도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을 이유로 사회복지 사업을 모두 지자체로 이관했고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경로당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난 2008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추경예산 508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금년에도 전국 5만 6000여 개의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난방비 4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부대의견으로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합의했던 여야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예산도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기 구입 예산 30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마치 현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위해 경로당 지원비 30만 원을 삭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참으로 비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께서 마치 대통령 영부인이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타인의 명예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법과 품위를 지키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50건의 성범죄 중에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가 19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응답자의 92.7%가 경찰과 영업소 간 유착관계가 관행적으로 또는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88.2%의 응답자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의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긍정적 평가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부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인권만큼 또 가해자들의 인권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피해자들의 인권이 그보다는 100배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번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얘기도 제가 꺼낸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그리고 나중에 처벌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CCTV를 설정하는 문제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지방 시찰을 갔다가 강원도에서 보니까 원터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터치 SOS 시스템.

이게 뭐냐 하면 핸드폰 소유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놓는 겁니다.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만 등록을 해 놓으면 만약에 어디 으스스한 길이나 이런 데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적에 1번을 누르면 바로 그 자리하고 그 사람의 신원, 위치 이런 모든 것이 경찰에 바로 신고가 되어서 강원도 경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약 50~60%의 성범죄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이 원터치 SOS 시스템을 일단 시행을 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라든지 특히 여성

이라든지 어린이와 같이 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장관님, 경찰청에서 성범죄 종합 대책을 위해 전담관리요원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안호대 의원** 그런데 지금 인력 충원이 잘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인력 충원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의경들을 경찰로 충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한 5000명 정도 늘리기도 했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서를 한 10개 정도 증설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또한 3급 경찰서 같은 경우는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아니라 여성청소년계가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여성과 청소년 범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여성청소년계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주로 예방에 역점을 두고요, 강력과 또는 강력계에서 범인들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경찰서를 한 10여 개 정도 증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경찰 인력 증원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반영하면 집행 가능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입니다.

○**안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청입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호대 의원** 또 CCTV도 학교 내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설치와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호대 의원** 제가 경기·서울권의 초등학교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정문에는 아직까지 청소년지킴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할 부처와 사업의 명칭이 계속 바뀌고, 각 부처 간 유사 업무를 산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아동과 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5월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호대 의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혜진·예슬 양 사건 등 빈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서 총리실에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용 여성가족부를 주무 부처로 정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성가족부가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등 그런 취지에서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추진점검단을 여성가족부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코 총리실에서는 그 문제를 여성가족부에만 맡겨서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총리실에서는 여러 부처하고 관련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결코 서로 헛갈리거나 또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총리님,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국보 285호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목록인 반구대 암각화를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안호대 의원** 총리님,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부처가 문화재청

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문화재청과 또 그것을 위임 받은 울산시가……

○안효대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암각화 보존 현실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도에 축조된 사연댐에 의해서 45년 동안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71년도에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 그리고 95년도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에도 보존 방안에 대해서 논란만 계속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풍화과정 5단계 중에서 4~4.5단계 즉 흩어지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방치하다가 세계적 문화유산이 무너져 내린다면 대한민국 국보의 심대한 훼손이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총리님, 이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2010년 2월 1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문화재청·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효대 의원 그때 보면 사연댐 수위를 52m 아래로 하향 조절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대체수원 확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안효대 의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연댐의 수위를 60m에서 52m로 낮게 유지해야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그만큼 수위가 낮게 조절됨으로써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물 확보 방법을 일응은 대구 쪽에서 확보하기로 일단은 결정이 되었는데 다만 구미댐 위쪽으로 취수원을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 간에 다툼이 생겨 가지고 이 문제가 아직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수위를 먼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문화

재 보호를 위해서,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위해서 사연댐 수위를 먼저 낮추는 것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수위를 낮추어서 보존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물 부족의 문제 서로 결연은 되어 있습니다. 결연은 되어 있는데 여하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효대 의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효대 의원 그런데 오로지 낙동강 수계의 영남권 1320만 주민의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용역 결과를 지난 6월에 발표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안효대 의원 그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금년도 10월까지 아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안효대 의원 오늘 벌써 11월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KDI에서 금년 10월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대충 마무리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지역 간의 갈등은 있지만 원칙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효대 의원 아울러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마찬가지로입니다.

○안효대 의원 예산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발주를 내셔서 반구대 암각화도 보존이 되고, 물도 해결되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암각화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안효대 의원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번 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조만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우리나라 어업형태 중에 보면 쌍끌이 멸치잡이어선을 뜻하는 기선권현망 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국무총리 김황식 잠깐 한 가지,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2011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2010년 6월 달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지역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그것을 행정부에서 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도 좀 하고, 만약에 피해가 된다면 피해보상,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딜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선권현망 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권현망 조업은 5척 이상의 선단으로 구성되어 2척의 선박이 초대형 그물을 끌어서 멸치를 잡는 조업형태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남해안연안 그리고 동남해연안 일대가 기선권현망 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울산연안만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을이 되면 30t에서 100t의 대형선박으로 구성된 멸치잡이 선단이 울산연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멸치잡이 대형선박들로 인해서 울산연안에 설치된 그물과 통발

등 파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업활동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경제행위로 인해서 한 지역의 생계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울산지역 어업인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역 어업인과 기선권현망 업체 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사자들 간에 좋은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어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총리님, 1997년 7월 15일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997년 7월 15일이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3년 동안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 관할이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거든요. 없었는데 지금은 광역시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효대 의원 총리님,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최근에 해운대 고층건물 화재 등 재난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복구 대책 등의 유일한 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가 현재 소방방재청의 2차 산하기관으로 총 26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과 규모로 대한민국의 재해예방 그다음에 복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재연구소를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 소관의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주시고 또 조직과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방재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

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난에 관한 사항은 지진, 풍수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 기관에서 지금 연구하고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연구소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연구소가 방재에 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 조직이나 예산 지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총리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재연구소가 적어도 한 6~7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유일한 국립방재연구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효대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에 있는 태화강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썩은 물이 흐르는 죽은 강이었습니다. 지금의 태화강은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돌아오고 하류는 철새 도래지가 되었습니다. 또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살려낸 것처럼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강에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치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야 지도부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이 공정한 사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희생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만은 헌법 54조2항에 정한 기일 내에 내년 예산을 반드시,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을 출신의 민주당 장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전주 완산 을의 민주당 장세환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현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 사무실과 집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럴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라는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의원** 아니지요, 그럴 만한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면 국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정부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도 방금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겠지요. 명색이 현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 사무실,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게 평시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비상계엄 아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장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과거에 후원회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12명 현역의원을 회기 중에 그것도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그렇게 긴급하게……

지금 그분들의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밝힌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역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도 되는 겁니까?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죄지은 사람 봐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능멸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사무실 책상은 압수를 하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의, 책임자의 책상만 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결국 이것은 지금 검찰이 폭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엄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장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구체적인 상황 파악 이전에 장관의 어떤 가치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마 검찰에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강기정 의원 보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다면 혼자만 압수수색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혼자만 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10만 원짜리 후원금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여기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것은 검찰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비교적 성의 있게 답변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묻겠습니다.

방금 법무부장관한테 물었듯이 현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 사무실과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시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총리 생각은 어

떻습니까?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어떤 근거와 사정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장세환 의원** 지금 법무장관하고 총리가 모르는 일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폭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 막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세환 의원** 물론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는 더군다나……

○**장세환 의원** 그러나 그렇게 국회의원 1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면 중대한 일이지요. 그리 중대한 일을 장관이나 총리 모르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관이 관여하거나 더군다나 총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또 검찰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총리한테 보고하거나 그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장세환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총괄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장세환 의원**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청와대 대포폰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사실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정에 어떤 근거……

○**장세환 의원**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평생 신망 받는 법조인으로서 그 양식으로써 민주적 가치관을 한번……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을 한꺼번에 압수수색 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이나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만약 모든 사정을 제가 다 소상히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장세환 의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총리께서 인정했듯이.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청와대 대포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 아무개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언제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9월 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쯤, 9월 초 쯤 됩니다.

○장세환 의원 8월 말, 9월 초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최 아무개 행정관이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7월 말 쯤, 8월 초 쯤…… 칠팔월 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장세환 의원 칠팔월 경이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장관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칠팔월 경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장세환 의원 오늘 오전에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를 7월 초에 구입을 해 가지고 8월 초에 해지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장관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러니까 칠팔월 경에 사용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세환 의원 수사를 했으면 언제 구입해 가지고 언제 해지했는지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얼마나 따져지고 있는데, 여야 간에.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제가 칠팔월 경에 사용……

○장세환 의원 정확한 날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닙니다.

○장세환 의원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게 구체적인 수사 상

황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장세환 의원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장관이 날짜를 제대로……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러니까 칠팔월……

○장세환 의원 날짜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칠팔월 경 사용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세환 의원 7월 7일 날 이미 해지를 했는데 무슨 칠팔월 경 사용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8월 달에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해지는요…… 그게 아니지요.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사건을 그때 바로…… 기소한 때가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어느 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장세환 의원 최 행정관 관련해 가지고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최 행정관은 기소를 한 사실이 없고요.

○장세환 의원 기소는 안 했습니까? 조사만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을 9월 8일 쯤에 기소를 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지금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언제 제출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공판심리 중에 제출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공판심리 중에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그때가 9월……

○법무부장관 이귀남 10월 경입니다.

○장세환 의원 10월 경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기소 직후가 아닙니까? 기소 직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기소 직후가 아니고 공판심리 중에 제출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장세환 의원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말입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1일 날 이석현 의원 질문에 답할 때 법정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사…… 예.

○장세환 의원 다음 날 한겨레신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때 물론 신문을 보셨겠지만. 법원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원에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날, 그날 1일 날 왔다는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도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기록에 다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법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원이 잘……

○**장세환 의원** 한겨레신문이 오보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원에서 아직 기록을 충분히 못 봤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장세환 의원** 10월 26일 날 기록이 하나 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포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영장청구서에도 들어 있다고 기록이 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기록에 없는…… 아니, 그러면 한겨레신문이 오보한 겁니까, 법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장관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상황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록이 가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하하, 참…… 그냥 마구 뺄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닙니다. 기록이 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대포폰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이 수사에 관해서 압수수색이 한 이틀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컴퓨터 디스크를 전부 다 파기하여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정말 좀 빨리 했으면 충분히 파악을 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장세환 의원** 아니,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는 개입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개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아니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

이……

○**법무부장관 이귀남** 증거인멸이나……

○**장세환 의원** 그 대포폰을 총리실 직원에게 주어 가지고 증거인멸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정황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번 11월 1일 날 이석현 의원 질의에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세환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 민간인 불법조사 사건이나 증거인멸 사건에 공범으로 처리할 만한 그런 사안은 드러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장세환 의원** 그래요, 수사를 다 해 봤는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없었나?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대한민국 검찰이 장기판 줄입니까? 어제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드라마 대물이 왜 요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집권당 대표를 성역 없이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정사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검찰이 성역을 인정을 하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 정도의 혐의도 못 밝혀낼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을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장관,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검사들이 정말 소신 있는 검사라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울분과 불만을 가지고 그걸 소주잔으로 사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에 의해서 검찰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다 추적을 해서 민간인 불법조사 사건을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또 수사 의뢰하지 않은 사람

까지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조사하는 부분까지도 새로이 밝혀서 다 기소를 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권력 그것 잡아봐야 검찰, 인정해 줍니까?

저는 이번 청와대 대포폰 관련해 가지고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지검장을 저는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오전에 주승용 의원님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라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또는 언론에서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다 검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다 법원에 나가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다 검토하고 다 했는데도 못 밝혀내는군요. 참말로 한심한 검찰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못 밝혀 낸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세환 의원** 중앙지검장 경질 의사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현재까지 잘못된 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목회 사건…… 저는 말입니다. 청와대 대포폰 사건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건이 청목회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전형적인 표적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청목회 사건은 혐의사실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법안을 대표발의한 분이나 또는 감사패를 받은 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찾아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흘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언론에서 찾아내서 보도하고 있

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습니다. 대표발의……

○**장세환 의원** 청목회 사건이라는 것도 언론에서 처음 찾아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것은 그 분들을 청목회 회장을 구속하니까 알게 된 것이고요.

○**장세환 의원** 청목회 회장 구속하고 국회의원들이 몇 명 관련이 있는 것하고, 어떻게 압니까, 검찰이 얘기 안 하는데?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명수도, 언론에서 거명한 명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래서 언론이 다 추측해서 보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날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이 추측해서 보도했다고’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장세환 의원** 그러면 추측해서 보도를 하면 청목회사건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또 저걸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르키며)

각 신문이 동시 다발적으로 똑같이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해 가지고 검찰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10월 30일 날.

언론이 어떻게 다 똑같이 추측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검찰이 밝히지 않았는데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방금 보여주신 것에도 보이지만 우리 의원님 존함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 의원들 얘기가 아닙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뭐니까? 혐의를 입고 있는 그 사실이 피의사실 아닙니까? 그걸 흘리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이고요.

자, 특정 신문을 보십시오. 오늘어제그제 계속 검찰관계자 말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검찰, 청목회 인터넷카페에서 핵심증거 확보’ 이것이 검찰 발표로 해 가지고 사흘 연속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추측해서 가능합니까? 언론이 추측해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구체적인 피의사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세환 의원**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아니면 저건 그러면 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또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가기 때문에 그건 또 다 알려지게 됩니다.

○**장세환 의원** 그건 압수수색을 갔을 때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혐의사실이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한 것이고,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이 부분들은 피의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피의사실은 됩니까?

지금 그런 말장난 할 때는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난 장관이 정말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어떻게 추측해서 그런 사실을 다 보도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점이 전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아주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리나 또는 검찰수사의 무능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집단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검찰의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직 재판중이고 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관심을 표명하거나 언급을 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하실 일은 아니고요.

○**장세환 의원**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나 강기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공적으로 대통령이시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마 굉장한 충격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장세환 의원**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장세환 의원** 그러나 대통령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감정 표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감정 표출이라는 것이……

○**장세환 의원** 그런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회가 공정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리,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정 표출보다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지……

○**장세환 의원** 이 문제로 개헌하자는 것입니까? 면책특권은 개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장세환 의원** 지금 LH 본사 이전문제로 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전북도하고 아주 침체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장세환 의원** 총리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진주하고 전주 간에 이해 때문에 서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디로 할 것이냐? 일괄해서 이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기관을……

○**장세환 의원**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하면요……

○**국무총리 김황식** 분할할 것이냐……

○**장세환 의원** 진주로는 주공이 가도록 되어 있

었고, 전주로는 토공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가 처음에 분산배치하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북도는 그래서 국토부 뜻에 따라서 분산배치안을 냈던 거고, 경남도는 일괄배치안을 고집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분산……

○장세환 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효율적인 것은 일괄배치가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이걸 일괄배치 할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고 또 최종적인, 합리적인 양 지역이 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지금 현재 연구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말하자면 양 지역의 이해가 적절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또 그런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그런 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들이 사퇴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인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신상에 관해서는 관여할……

○장세환 의원 현 위원장 취임 이후로 대한민국 인권이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신문에 가끔 인권위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서로 잡음이 나는 그 정도……

○장세환 의원 지금 상임위원들이 사퇴하고 시민단체들이 어제부터 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하튼 인권위원회가, 말하자면 고유목적은 달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조직이

서로 협력해서 잘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시끄럽고 분란이 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 원인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인권위원장에게 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이나 조직원들한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하고 검찰이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회 의원이나 때려잡는 이런 수사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를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국민은 민주주의 파괴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장세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출신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세계 최강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릿고개의 기억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보면 국민의 의식과 문화수준이 외형적 성장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밖으로도 국가경쟁력에서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국력에 어울리는 위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주제 질문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나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성윤환 의원 그것을 뇌물로 주고받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표도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강 의원의 발언 내용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있다면 고발을 하든가 언론에 추가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반대로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윤환 의원** 그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윤환 의원**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오로지 타인을 비방·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헌법 면책특권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것은 국회에서 중의를 모아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호도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본인은 청목회 법안 로비사건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동료 의원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이런 이중적 행동은 강 의원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포폰과 차명폰이 어떻게 다른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차명폰 포괄해서 대포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대포폰은 명의자 몰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차명폰은 명의자의 이름을 동의를 받아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완전히 허무인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성윤환 의원** 문제된 것이 대포폰입니까, 차명폰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문제되는 것은 차명폰입니다.

○**성윤환 의원** 확실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성윤환 의원** 검찰이 조사한 결과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성윤환 의원** 그렇다면 이것 대포폰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은 차치하고 형사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성윤환 의원**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의혹이 커진다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내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대기업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기업.....

○**성윤환 의원** 그것 말고 대포폰 문제에 관해 말씀입니다.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것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직원 컴퓨터와 USB에서 'BH 하명'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 지시로 민간사찰을 한 것이 틀림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사할 때 다 한꺼번에 했던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성윤환 의원**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조사 부분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윤환 의원** 그렇다면 청와대의 지시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전혀 없습니다.

○**성윤환 의원** 없습니까?

야당은 검찰이 외압으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윤환 의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어서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기획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명박 정부에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거나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각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부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 비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성윤환 의원**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뉘어져 있고 또 대통령 소속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 전망 및 국가비전 전략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고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통합·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환 의원** 미국에는 국가정보위원회가 있고, 영국에 전략국, 프랑스에 전략분석센터, 일본에 국가전략실 등 선진국 대부분 미래전략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장기 목표와 계획을 갖지 않으면 정부 각 부처는 모두 단기 관점에서 모든 일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관해서 미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국가발전 목표와 방향을 구상하는 통합적 국가기관 즉 국가전략기획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지적대로 장기 국가미래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에 합당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구들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이런 분야별로 특별한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총리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윤환 의원** 그러나 미진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미진…… 나름대로……

○**성윤환 의원** 통합기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요즘 국정과제로 대두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 이념을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정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정사회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탈락된 약자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다른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전

체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적 작용이나 사적 작용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주창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으로 화답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수면 위에 떠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두 발주 관행이 만연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또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등을 일으키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아울러서 해결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건설업체 유동성 부족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말하자면 좀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여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기울여져야지 지금 이 정도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동영상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어느 자동차회사의 1차 협력업체 노조지부장을 만나서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이 아직도 감사실 직원을 협력업체에 보내서 제조원가를 조사하고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대기업의 감사실이 납품단가를 낮추는 데 말하자면 강요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화면의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동차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004년에 27조 원이었습니다. 2009년

에 32조 원으로 16% 증가했는데 부품매입액은 15조 5, 6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노조지부장의 말과 합쳐서 본다면 자동차회사가 실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매출액에 비해서 재료비, 부품구입액 등이 증가되지 않았다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협력업체의 단가를 속칭 말하는 후려치기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또 다른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사정이 그렇다면 정부의 직권으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0만 개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했고 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직권조사를 실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정의화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반성장, 그 대책이나와 있는 만큼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사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 회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60%는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법에 대한 인식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이 법률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치주의만 제대로 실현돼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 1~2%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런 경제연구소의 보고도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정부는 늘 불필요한 규제, 법률을 철폐하겠다고 합니다. 또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지금도 규제 일변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

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허가에 대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법률 파괴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불러 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박용성 두산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무슨 명단입니까, 이게?

재벌 회장들 명단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형사책임을 이런저런 사유로 졌던 분들, 그중에서……

○성윤환 의원 이분들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다 사법처리 됐다가 특별사면 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률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법률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모든 법률이 국민들한테 균등하게 적용될 때에 국민들의 법치의식도 높아지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이런 모습이 균등하게 적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법률은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닙니다. 가진 자의 편도 아니고 못 가진 자의 편도 아닙니다. 치자의 편도, 피치자의 편도 아닙니다.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법률이 이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원활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성윤환 의원 우리는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직 법률과 제도에 의한 지배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윤환 의원 법률의 지배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률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법률을 정비하고 집행해 나갈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이 잘못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법률을 지킬 때 그것이 곧 나의 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국민들의 법의식을 계몽하고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민관과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외국 이주민정책에 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5년 동안 75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계획된 것을 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해서 우리의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 성공 가능성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과거에 불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

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이러한 출산장려정책과 아울러서 외국인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동의합니다.

○**성윤환 의원**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대중음식점 등 이런 데는 이미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이런 실정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성윤환 의원** 단순히 단순기능직 외국인의 취업으로 인해서 내국인의 취업 기회가 잠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그렇다면 기업의 해외 진출보다는 외국 근로자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한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이러한 고려할 요소는 있지만 다른 그에 따른 부작용도 아울러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그런 노력,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정책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우리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잘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세워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국가보훈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국가유공자 기념물을 시청 광장이나 공원, 시내 중심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의사당 모습입니다. 광장에 전쟁기념탑이 있고요, 중앙 홀에 참전 용사를 기리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청 광장이나 시가지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청사, 출신 학교 중앙 홀에 전사자 명단을 표기하고 시청 광장이나 중심가에 기념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가기관에서 그 실정에 맞게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성윤환 의원**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믿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적인 명단도 새겨져 있고 또 외국에도 흔히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생활을 하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조형물들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을 찾아 기리는 일보다 반역 행위자를 찾아서 비난하고 문책하는 일에 골몰해 왔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각종 보조 지원, 연금 등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성윤환 의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역으로 얻은 부와 명예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윤환 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예우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반민족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땅에 버려진 독립 유공자의 후손과 유해를 찾는 데 얼마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지고 또 민주화도 되면서 정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래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참전 유공자 65세부터 9만 원 받습니다. 수훈 유공자 60세부터 15만 원 받습니다. 대부분 6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는 80세를 넘겨서 생존자도 많지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이제 경제 수준도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 보훈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성윤환 의원**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에서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연간 131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사업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을 지한 인사로 만들어서 저변을 확대를 하고 또 그쪽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장래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성윤환 의원** 금년 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지원에 비해서 한국학 성과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진국 대학에 이런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공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개발도상국 대학생을 불러서 3~4년간 교육시켜 돌려보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2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해외 66개 대학에 95석의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또 95개국에 4000여명의 한국 전공학자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변을 넓히고 기반을 쌓았다 하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다 생각을 하지만 또 의원님 지적처럼 그런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널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환 의원** 해외 유학생 유치 장학사업은 우리 학생에게 세계화에 대응할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는 유력한 친한 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윤환 의원** 새마을운동 경험 수출과 관련하여서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최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후진국의 성공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80개국 4만 8000여 명이 새마을운동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현재 25개 나라에서 우리를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새마을운동과 기타 산업경험의 지원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고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새마을운동사업을 외국에 전파하는 데 여러

기관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ODA 선진화방안의 하나로써 새마을운동사업을 정확히 전달, 전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사업에 관한 것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그것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외국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원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최초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원조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원조 기본방향과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OECD DAC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총리실에서 회의를 해서 확정된 것은 그동안에 무상원조, 유상원조 따로 또 각 부처 따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원조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또 국민소득의 0.1%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2015년까지는 0.25%로 늘리는, 액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맞춤형, 그 원조를 받고자 하는 그 나라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아까 새마을운동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많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다시 잡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총리님 말씀과 같이 물적 원조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같은 노하우 등도 함께 원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은 원조 전달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형편이나 원조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고 또 그에 관한 조직 기구가 총리실에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윤환 의원 말씀 들어보면 모든 것을 총리실에서 다 통할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야 어디 업무능력이 오르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실의 업무가 정말 많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잘 선두에서 이끌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금년도 해외문화원 예산 165억 중에서 사업비는 경우 20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한국문화알리기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윤환 의원 이게 16개 문화원에서 20억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환 의원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금년에 4개 나라에 문화원을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와 진출이 용이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문화원을 증설하면 우리 국격 향상은 물론이고 무역시장 선점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진국 중심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요새 한류 열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더 국가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해서, 해외문화원 설치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원 평균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동경은 7억 9000만 원, LA는 4억 9000만 원…… 국격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

해서 해외문화원 그리고 해외홍보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환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선진 일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의 제안을 수용해서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성윤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너무 급박하고 또 다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먼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또 앞서 장세환 의원이 대정부질문한 내용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백주대낮에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1명도 아니고 12명에 달하는 의원의 가택과 그리고 사무실이 일제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과거에 유신정권이나 5공, 6공 때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대법관을 지내시고 법조계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좀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장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수사 경위나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느낌

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리에 들어가서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법원에서 나름대로 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한다면 또 그럴 만한 합당한 근거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게 과거 유신이나 5·6공 정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사법적 절차를 따지기 이전에……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처음 있는 일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청목회와 관련된 이 사건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후원금을 받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어떤 불법 뇌물을 받는 그런 현행범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 사건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중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또 그 대상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높다고 저는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집까지 뒤지고 그리고 그 사무실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한번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다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강제수사의 한 방법인데 인신에 직접 어떤 강제성을 가져오는 체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한다 하는 그 정도에 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아마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번 수색을 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이례적인 사건이고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 때 정무적 판단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까닭은 대법관을 물론 지내셨습니까마는 그런 어떤 사법적 요건이라든지 형사적 절차를 제가 여쭙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번 집단수색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 총리로서 봤을 때 그런 파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대정부질문이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이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현행법도 아니고 또 신분이 현역 의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제히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벌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솔직히 제가 정무적인 판단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면 그런 것을 가지셔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께서 정무적 판단을 못하면 총리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이례적인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말씀 속에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께서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법무부장관은 어떻습니까, 검찰청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에 검찰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검찰을 법무부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휘 감독하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창수 의원**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휘권까지 발동할 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창수 의원** 그러면 심각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조금 전에 장세환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까마는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휘 감독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월요일 날?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래서 그 사실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일처리를 해라라고 제가 대검에 지시를 했어요.

○**김창수 의원** 대검 누구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대검에 지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김창수 의원** 대검 누구에게 지시를 했냐고요? 검찰총장한테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대검 쪽에 지시를 다 했어요.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번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라라는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검찰에 대한 지시를 내린 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국회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김창수 의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지금 저도 오후 질문시간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아마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다만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시피 12명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어떤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끝나면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는 시점을 물어본 까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현직 장관이

나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거나 할 때는 장관께 보고를 하지요? 사전복명을 하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중요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김창수 의원** 검찰 수사의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영장을 할 때는 합니다마는 압수수색영장을 할 때는 사전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게 어디에 명시가 돼 있나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희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러한 국회의원 12명에 대해서 이런 압수수색의 이례적인 그리고 도발적인 지금 이런 수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검찰은 독자적으로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이게 처음에… 지금 오늘 전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해서 그러한 위급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오늘 시작됐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도 하고 또 관계되는 청목회 관계자들은 구속도 하고 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지금 법무부장관께 이런 것을 검찰에서 사전복명이나 보고를 안 하고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압수수색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김창수 의원** 직전이든 직후든 그건 큰 대차가 없겠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어쨌든 수사는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청와대에 오늘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장관께서 보고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김창수 의원** 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실무자들이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민정라인에 보고가 됐나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실무자들이 했는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요, 지금 제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밝힐 수 없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다음 주면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창수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경호법도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호·경비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큰 대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에 만반의 그걸 갖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창수 의원** 이게 뭘니까, 이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저도 며칠 전 언론에 검찰에서 G20 상황……

○**김창수 의원** 정말로 G20 정상회의를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잘 치루어 내고 그리고 국격을 높이고 우리의 국익은 챙길 것도 챙기고, 그러한 주최국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이고자 하는 뜻이 과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저도 최근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조치라서 제가……

○**김창수 의원** 누구나 개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로만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런 국제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하자고 말로만 하고서 뒷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 집까지 쳐들어가서 가택수색 벌이고, 대낮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까, 이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압수수색 시기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G20을 앞두고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의원** 자,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똑같은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후유증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파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제가 여쭙어 봤습니다.

먼 얘기를 떠나서 이래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가 앞으로 다음 주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바 G20 정상회의가 치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잔칫집 잔치 벌여 놓고 나서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걱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갈등이나 대립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김창수 의원** 잘들 좀 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마구잡이로 망나니가 휘두르듯이 이렇게 마구 휘둘러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3권이 보장되는 그런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실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지금 청목회 사건에만 매달려 있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또 한나라당 자체 내에서도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사건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에 BH 하명이다 또는 대포폰인지 차명폰인지 이런 것들이……

○**김창수 의원** 예? 대포폰 이름이 뭐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대포폰이다 차명폰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사정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수사해서 기소할 때에 전부 나왔던 사실인데 다

만 그에 합당한 어떤 수사는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것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불기소했던 이런 사안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하는 그런 사안인 만큼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나오면 당연히 필요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나 있는 사정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검토됐고 또 다 제시가 됐던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다면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또 가뜩이나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재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김창수 의원** 재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리께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그에 따라서……

○**김창수 의원** 따라서 수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조치를 취하겠죠?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이지요.

○**김창수 의원**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진술에 중요한 그 단서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대포폰이라는 것도 지금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대포폰이 청와대의 장 아무개라는 행정관이 시켜서 공직윤리관실의 누구입니까? 주 아무개한테 해 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간 부분을 삭제하고 이랬던 그 내용들이 새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이강덕 팀장에게 민간인 사찰보고를 했다, 현재 경기도 경찰청장인 이강덕 팀장에게 했다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기소 전에 이미 드러났던 내용입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기소·수사단계에서 나왔던 것하고 그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차명폰에 관해서도 일응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증거인멸죄로 기소하기 전에 아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사 여부라든지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일단 무혐의나 불기소 사유라고 해 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범죄가 명백히 인정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옳은데 다만 그것이 종전의 수사하고 비추어 가지고 아주 새로운 사실이어 가지고 새롭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만한 그런 사정이냐 아니냐 하는 자체조차도 일응은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라고 했다가 또 아주 새로운 사실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약간 좀 고쳐서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죄송 이제……

○**김창수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사 당시에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거의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BH 하명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이 그때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대포폰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것도 새로 폭로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총리실하고의 모종의 이 사건에 관련된 개입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지시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몸통과의 어떤 단절을 시도한 이러한 사건의 은폐 조작 축소와 어떤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안 하겠다 이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나온 다든지 그다음에 차명해서 사용한 핸드폰이라든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사정이고 또 그러한 사정들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그런 사정이 있다 한다면 일단 그걸로 수사는 종결된 것이고……

○**김창수 의원** 좋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이 이제 새삼스럽게 알려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사정이다, 수사를 다시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평가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그 사실관계나 수사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께서……

○**국무총리 김황식** 나는 일반론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 의원**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은 주무 장관께 여쭙 보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법무장관께서도 직접 수사라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 봅니다.

대포폰 이 존재가 이번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총리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게 언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7월 5일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계시네요.

6월 24일 날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무려 1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실에서 부랴부랴 마지못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구성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창수 의원** 압수수색은 언제 했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압수수색 언제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7월 9일 날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예?

○**법무부장관 이귀남** 7월 9일 날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7월 8일 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9일……

○**김창수 의원** 7월 8일 날 했는데,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당일 날 중앙지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는데 압수수색은 사흘 후

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압수수색한 사이에 7월 5일 날하고 7월 7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김창수 의원**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졌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공개적으로 총리실이 수사 의뢰를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은 사흘 후에나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틀간에 걸쳐서 그 하드디스크가 외부에 반출돼 가지고 그것이 증거인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청와대 아무개와 총리실 아무개가 휴대폰을 통해서 교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니까?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김창수 의원** 그리고 그걸 방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세환 의원님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다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늦게, 한 2~3일 이따가 청구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해야 제 입만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황당하고 황망한 이런 사건이 민주국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 회기 중에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또 청와대 영부인에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보복수사 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상식과 원칙과 법치에 입각해서 판단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건입니다.

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그리고 청목회 사건 이 사건을 다루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웬지 작아지고 그리고 죽은 권력 앞에서는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조자룡 현 칼 쓰듯이 하는 이 검찰이 아

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바로잡아 줘야만 이 나라가 바로잡아진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또 다시 직감하면서 그리고 이번 검찰의 수사가, 스스로 자초한 이런 강압적인 수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운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조운선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닷새 동안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정부질문의 마무리에 즈음해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동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동화입니다.

독일 작가 모니카 페트라는 동화작가가 쓴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청소부입니다.

날마다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음악가의 거리와 피테, 실러 작가의 거리의 표지판을 닦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글뤼크(Glück) 거리’라고 써야 되는데 저기는 ‘글루크(Gluck) 거리’라고 써 있네요. 틀렸어요.” 독일어로 글뤼크에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지만 글루크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리지 않았어. 글루크는 유명한 작곡가의 이름이란다.”

아저씨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리가 무얼 뜻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아저씨는 신문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공연과 오페라에 관해서 열심히 기사를 찾았습니다. 집 주변에서 하는 공연장도 자주 찾았습니다. 공연장을 갈 때에는 가져다 놓았던 양복과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음악공부를 마친 다음에 아저씨는 작가들의 작품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었습니다.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점점 자기가 아는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듣게 됐습니다.

구름 같은 청중이 모여서 아저씨는 곧 유명스타가 됐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두 거절의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청소부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바쁘게 유치하게 그림동화 읽고 있다고 편견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문화복지가 충만한 사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총정리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부분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예체능계열 졸업자 수가 1년에 한 6만 7000여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의 한 70%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그런 직장과 같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조윤선 의원 우리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다면 바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내수시장의 가장 큰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한다면 우선 민간에 기업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 해군청 건물입니다. 보수비용이 한 1080억 들었습니다만 한 기업이 후원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60%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베르사유의 궁의 거울의 방입니다. 180억의 보수비용이 들었는데 역시 한 기업

이 후원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이렇게 문화예술기부금을 준다 해도 특별하게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프랑스가 이 법을 도입한 후에 기업의 문화예술의 협력 액수가 3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모두 1조 5000억이 됐다고 합니다. 장관님, 미국에 문화부라는 부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미국에는 없습니다.

○조윤선 의원 문화부에서 쓰는 재정도 없겠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콘텐츠 관련된 내수시장, 우리의 15배나 됩니다. 우리는 콘텐츠 관련해서 재정을 쓰면서도 그렇게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된 지출에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연계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콘텐츠 관련된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것은 저는 오래 전부터 현장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실제로 꽤 오래 전에는 국회 상임위에 세수에 관련된 문제를 청원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차라리 안 올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기업이나 또는 많은 그런 후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의원 저도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이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총리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장관께서도 기재부장관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열심히 의논도 하고 제도적으로, 이게 저희 부처만 관계된 일이 아니고 아마 부처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자체에서도 아마 어느 한쪽을 해결하다 보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 예산 자체가 워낙에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이제 복지와 교육 부분의 정부 수요를 늘릴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와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

히 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문화와 관련된 복지와 교육의 예산, 지출이 늘다면 이는 곧 문화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중요성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조윤선 의원 다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와 그렇지 않은 과학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노벨상을 받으시는 과학자들은 창의성이 남다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열렸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윤선 의원 거기에 참석한 ‘생각의 탄생’의 저자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강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예술을 아는 과학자인지 아닌지에 있다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교육센터에 따르면 수학과 과학에 영재인 애들 중에서 10% 정도가 음악과 미술에도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 예체능 교육은 뒤로 하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 학교들은 지·덕·체의 순서를 체·덕·지라고 할 만큼 체육과 예술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우리나라 초·중·고의 교육은 시험 잘 보기 위한 교육 그래서 지·지·지 교육이라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일부 뜻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전인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치중하려고 해도 학부모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저희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도도 도입하고 또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예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도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예술강사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이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크게 환영받으시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술강사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보다 수월하게 문화예술교육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금 영상에서 나오신다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교육시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윤선 의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그 연결망, 협력망을 구축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영국은 이미 100년 전에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굴지의 해외 미술관들은 학과 과정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데요.

다음 화면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K(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수업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미술관을 가 보면 잠깐 들리기만 해도 이렇게 미술관에서 수업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미술관에서는 교사의 연수가 자율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3시간만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올해 몇 명의 교사가 연수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선 의원** 모두 39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았 습니다.

본 의원은 박물관 미술관의 열린 교실화를 제 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부와 교육부 가 박물관 미술관의 수업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 도록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굉장히 중요 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 과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서 예술교육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 안에도 그런 내용 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원님이 지적하 시는 것처럼 선진국 수준만큼은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훨 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개선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 니다.

장관님, 지난달 14일에 한국형 엘 시스템아(EI Sistema),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셧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 제도를 무척 부러워했던 국민 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예산 배정하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조윤선 의원** 장관께서 계획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호세 아브 레우 박사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베네수엘라 의 아주 빈민촌의 어려운 아이들, 저희가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가 총탄에 맞는 그런 일도 발생하는 등 아주 우범지역의 아이들이 오 케스트라를 구성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해 가고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 게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엘 시스템아 오케스트 라의 단원이 30만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그것 이 나라의 분위기까지 바꾼다 하는 그런 사례고 요.

그것을 시작하신 호세 아브레우 박사께서 이번 에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되셔서 또 서울을 방문

한 적도 계십니다.

○**조윤선 의원** 장관께서 계획하신 우리나라의 제도는 어떤 방법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베네수엘라는 워낙 학교 교육이 많이 수준 이 낮아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진 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00개 학 교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역량 가지고는 힘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외부 의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컨대 주변의 음대라든지 대학의 대학생들의 자원 봉사 멘토링도 필요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들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금은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 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학교에 1억 원씩 지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좀더 그것을 충실 하게 저희들이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 정에서 고민들도 더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제가 호세 아브레우 박사를 직접 만나봤 는데요, 베네수엘라와 한국 오케스트라를 같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한국 학생과 베네수엘라 학생 이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어떠냐는 제 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네수엘라의 경 험을 같이 공유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 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선 의원** 누구보다도 이 제도가 성공했 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아브레우 박 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저도 사흘 동안 세 번 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께서 성공의 비결을 꼭 좀 알려 주고 싶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 조 언을 담게 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서는 음성을 들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화면으로 하고, 자막과 설명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브레우 박사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여쭙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음악교육에 헌신하고 꿈을 심어 줄 음악교사를 구하는 데 30년이나 걸렸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예술강사는 문화부 협조를 받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을 총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관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00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그 학교장과 또 그 담당하는 음악교사, 선생님께서 주가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각 학교단위가 아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정신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총괄하실 분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 위원회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아브레우 박사는 이 사업을 하는데 30년을 헌신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성직자처럼 음악교육에 모든 인생을 걸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이 나올 텐데요, “악기 빌리고, 임대료 내고,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게 될 때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모처럼 결정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 시스템은 베네수엘라 수도에만도 수백 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미리 면밀히 공부하시고, 단순히 겉모양만 이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물론 베네수엘라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음대생들의 저변이 넓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량이나 단위 학교의 역량도 베네수엘라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특히 최근에 예술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열의를 가진 조직을 하는 분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성공하기 힘든 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해 8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올해 문화바우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올해는 50억이었습니다.

○**조윤선 의원** 내년에 대폭 늘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내년에 245억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조윤선 의원** 앞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증가시킬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려면 그 수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무척 도움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관할 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뭐가 필요한지 면밀히 조사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윤선 의원** 바로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설문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요, 문화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문화향수 실태를 조사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굉장히 자세한 항목을 조사하시는데, 그 내용을 사회복지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조사한다면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향수할 사람들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의원님 말씀에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처가 사실은 이런 수치나 통계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활애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직원 수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엔 확실하게 보완도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총리실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바우처 문제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망이라고 해서 그 망을 통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또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행복이음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현을 시켜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통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마침 통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향유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가 부족하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GDP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분야를 공부했지만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또 앞으로 졸업할 인원 그래서 얼마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통계가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그런 통계는 아직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사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통계가 굉장히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통계는 각각 아귀가 맞지 않고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일관되고 꾸준하게 집계되는 통계가 필요하고 이런 기초통계를 마련해서 문화부 행정이 좀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그런 오명에서는 빨리 벗어났으면 싶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좀 보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의원님 지적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통계나 조사에 있어서 좀 다분히 사실은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동안의 관행처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충시켜서 좀더 정확한 수치하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화정책도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조윤선 의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하소연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영국의 문화정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문화부 정책을 소개하는 난에 문화부장관 노동부장관 지경부장관 그리고 해당 정무차관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고, 이 문화부 정책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늘려서 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기재부와 협의하셔서 이렇게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된 지출의 세제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현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일반적인 손비는 인정이 되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서 문화부와 복지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데 총리께서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 부처의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엘시스테마 정착을 위해서도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 총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총리께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또 80년대 반도체, 90년대 IT,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 내지 4%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재원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 또 창조산업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2% 내지 3%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론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분명히 상당히 전략적인 투자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 재정여건을 또 다소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총리님께서서는 창조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각별하게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알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게 해 줍니다. 문화와 예술은 갈등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저렴한 수단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국가를 꿈꾸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의화** 조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의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과 금요일 늦은 오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주시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G20 정상회의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리님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변방국가로서 강대국들이 정하는 정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국가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면서 오히려 국제질서, 특히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어떤 행사 차원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또 G20을 통한 많은 경험들이 앞으로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고려시대에 많은 남으로부터, 북으로부터 외침을 받았고, 조선시대에 중국에 가서 조공을 하고 세자 책봉을 받아오는 모습, 또 식민시대에 식민 지배를 받다가 6·25 사변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1953년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2만 달러를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오는 상태에서 세계 주요정상들이 한 삼십여 분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모여서 세계 경제 질서를 비롯한 새로운 체제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개무량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주광덕 의원** 그런데 많은, 우리 국가에 아직도 대외신인도나 신뢰 부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1%만 낮아져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총리께서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저희가 연간 4000억 불 정도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약 450조 원인데 디스카운트 1%가 낮아지면 약 5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대화를 원활하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역량과 힘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로서는 제일 관심사가 정상회의의 내용,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대테러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리실이 상황실을 설치해 해 가지고 각종 상황실과 서로 연계해 가면서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국가 시민으로서 교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과연 강제적인 2부제로 할 것이냐, 자율적인 2부제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의 고양된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믿고 자율적인 2부제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주광덕 의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로 결집하고 거대한 국제 행사를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잘 치러온 경험이 있습니다. 88올림픽이 그랬고 2002년 월드컵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높은 시민의식을 잘 결집시켜서 총리님께서 정말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때 행사는 강제적 2부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율적 2부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큰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이렇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된 데는 대통령이 꼭 잘 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 준, 그리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그렇다면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을 잘 섬겨서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뿌리내려야 되고 정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사회를 구현해내는 데도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주광덕 의원 오늘 있었던 현안을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야 국회의원 12명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저는 꼭 이렇게 정상회의를 6일

앞두고 이게 과연 적절한 검찰권의 행사, 압수수색 권한의 남용은 없는지 좀 과잉된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인지 하는 것은 제가 관심 갖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강제처분 수사, 구속을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을 강제수사라 그러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그럴 때는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필요하다고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충성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별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충성, 이 수단을 반드시 강구해야만이 혐의가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보충성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그러면 이 필요성과 보충성 두 가지를 겸한 그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강제수사, 압수수색은 적절한 것이지만 만약에 보충성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그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사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약간의 남용이 있다, 남용이라는 것은 과잉된 강제수사다, 과잉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확한……

○주광덕 의원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주광덕 의원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총리님께 오늘

이루어진 12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것이 보충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라는 수사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해야만 그 강제수사가 적절한 수사였다, 과잉수사도 아니고 수사권의 남용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라는 것은 신중하게 행해지는 것이 옳다, 당연합니다.

○주광덕 의원 지금 금년 경제성장률도 높고 경상수지 흑자만도 300억 불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런 좋은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서민들 또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이러한 효과가 집중되면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진행되어 온 과정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이것이 해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지금 그와 더불어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주광덕 의원 지금 OECD 여러 국가 중에서도 G20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사회갈등은 높고 사회적 신뢰도 또 국민들 간에 서로 또 계층을 달리하는 사람 간에 또 어떤 정파나 이념을 달리하는 서로 약간의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집단 간에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지금 높다는 것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24위라고 그러합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갈등지수가 더 높은 나라는 터키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갈등이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지금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지면 우리의 GDP가 7% 정도 증가하고 또 우리의 경제 발전 특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정말 사회적 갈등이 잘 관리되면 가능하다는 유력한 경제연구소의 보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주광덕 의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폐기되었고, 지금 현재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또 함께 안고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탈법, 편법, 요령, 꼼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이념간·계층간·종교간·지역간 갈등들을 전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소통·배려·관용……

○주광덕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사회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선언적인 주장에 그치는 형식적인 법률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거두는 그런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그 관련 법률이 또 의원입법의 형태로도 지금 정무위에 상정되어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대통령께 건의해서 정부입법이 또 준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의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

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6월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11조 원에 해당되고 금년 말 기준으로 매일 1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금자리사업 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떠한 걱정을 하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부동산경기의 하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합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등 해서 LH공사의 유동성 확보라든지 사업성의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서 LH공사로서는 어쨌든 건전하게 회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어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다소 우여곡절은 있지만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추진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입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만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계획대로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광덕 의원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간 75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런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재원 마련 계획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2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여러 달에 걸쳐서 재원 마련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될 거고요, 또 매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저출산 분야가 지난 5년간 19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출산율이 2007년에는 1.25로 좀 늘었다가 결국 2009년에 1.15명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19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결과만 놓고 보면 참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습니다만 5년간 19조가 투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출산 행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그게 출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차 계획에서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고 1차 계획에서 좀 효과가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2차 계획을 충실하게 열심히 해 가면 조금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또 기업 또 국민들 모두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1차 계획에는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기업이나 민간의 참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나 협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제가 2차 계획을 보니까 정책의 효율성이나 연계 효과보다 각 부처의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지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2차 계획에서 보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겠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게 저출산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투입하는 돈이, 과연 이분들이 뭐 가임여성들도 아니고 직접적인 연계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서 너무 종합적인 대책이고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원인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 또

왜 이런 부분은 빠졌느냐……

○**주광덕 의원** 장관님, 다 좋아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확대하겠다, 이게 저출산 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원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아니, 결국은 관계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게요, 전체적으로 출산의 주체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출산 문제가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의식 속에 우리 사회가 성 평등적인 분위기나 여건이나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의식에 이것이 전달이 될 때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광덕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더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도 다 결국 저출산 대책으로 연결된다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광덕 의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75조가 투입돼도 출산율이 또 어떻게 될 건지는 기대하기가 어렵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주광덕 의원**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8개 종류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필수예방접종사업 이원화 체제로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 가서 예방주사 맞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무료입니다.

○**주광덕 의원** 전액이 무료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맞으면 많은 국민들은 백신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접종비, 주사를 주는 비용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지요, 장관님?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지금 보건소는 전액 무료로 접종이 되고요.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에서는 접종을 할 경우 백신비는 국가가 다 대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냥 접종하는 접종

료만 한 1만 5000원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병·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뿐더러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그냥 2만 2000원, 백신값까지 다 포함시켜서 받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그 백신값만큼 다시 정부에 신청을 해서 받는 일이 귀찮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건소 이외의 민간 병·의원에 가서 맞을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지금 장관님 그 설명으로 TV 보시는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십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모든 병·의원의 백신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가사업에 참여하기로 의사표시한 병·의원의 경우에만 지금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주사비 1만 5000원 정도만 자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장관님,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시는 분이 48%, 그러면 38%에 해당되는 국민들, 예방접종을 받는 분들은 백신비와 주사 접종비 모두를 자부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광덕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소아과를 가는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30%는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1만 5000원만 접종비를 내야 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백신비 플러스 주사비 해서 2만 2000원까지 내가 다 부담하는 병원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어느 특정한 자기가 신뢰하는 동네의 어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단골 고객으로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을 맞는 시기에 그 부모는 그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병원일 경우에 그 부모는 여덟 가지 필수예방접종을 맞을 때 항상 100% 본인의 비용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OECD 국가, 아니 G20 회의 하잖아요? 우

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이것 전염병 위험이 높은 질환이니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국가가 지정한 겁니다, 여덟 가지가. 그렇게 해 놓고 돈은 국민들 알아서 ‘당신 주머니의 돈으로 맞으세요’ 이러는 나라가 G20 국가 중에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 그게 양육비용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일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좀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충분히 안 된 상태라서 그게 좀 편성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의원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지금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18개월 이전은 한 90%되는데 추가 접종해야 되는 12살 때까지 맞아야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광덕 의원 헌법 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 헌법 위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고 우리 경제의 규모, 교육 수준, 문화 수준, G20 정상회의 의장국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니 의원님, 저는 그 점에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지금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점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광덕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주광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수원 장안 출신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오늘 2010년 11월 5일은 검찰이 대한민국 국회를 가장 악랄하게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실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혀 없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얘기 갖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이찬열 의원 몇 시간 지났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국회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만한 여건이 안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여건이 왜 안 됩니까, 여기서? 휴대폰 없어요, 휴대폰? 휴대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데……

○이찬열 의원 그러면 오늘 화장실 안 갔다 오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안 갔습니다.

○이찬열 의원 생리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게?

○국무총리 김황식 참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찬열 의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 국회의원 12명의 사무실,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 준비하느라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이게 국무총리

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이찬열 의원 잠깐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나와 보십시오.

그동안 서너 시간 지났는데 장관께서는 뭘 파악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실무자가 와서……

○이찬열 의원 또 똑같은 얘기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실무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원님 자택에는 압수수색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찬열 의원 저희 집 압수수색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요, 전체 의원님……

○이찬열 의원 의원님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이찬열 의원 그러면 그 들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의원님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의원님 질책을 듣고 제가 확인을 빨리 해 보라고 했는데 의원님 자택에는 압수수색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찬열 의원 그러면 오늘 꼭 이렇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수원 출신 이찬열이가 대정부질문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이렇게 맥을 빼놔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 생각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오세요.

오늘 같은 초유의 일은, 이승만 독재정권에서의 부산 정치파동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또 박정희 군사정권의 5·16 혁명 후에 모든 정치인들 연행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이 이후에 최대의 아주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위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찬열 의원 내용을 몰라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저는 이제 법률가 출

신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관의, 요새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 그게 아니고 오늘 일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이찬열 의원 본 의원이 두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왜 이 시점에 그와 같은 이례적인 일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찬열 의원 본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정부질문하는 날 국회의원 열두 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그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며 국회를 유린한다고 보는 겁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찬열 의원 만날 똑같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정이 바뀌지가 않았으니깐요.

○이찬열 의원 사정이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변동이 된 것이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열두 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어 가지고……

○이찬열 의원 하여튼 총리님의 문제는 지금 네 시간 가량 이상이 지나갔는데도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 파악을,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여기에 제가 전부 ‘님’ 자를 다 붙여 가지고 왔습시다, 의도적으로. 좀 존경을 해 드리려고. 그런데 오늘 이게 ‘님’ 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막 그렇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회관도…… 자택 압수수색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택 압수수색할 계획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이찬열 의원** 또 확인합니까, 그것도? 아이고 참, 이거……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판단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찬열 의원** 지휘권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것은 지휘권 발동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찬열 의원** 뭐가 별개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회관은 언제 압수수색할 겁니까? 의원회관에 사무실 또 있습니까, 여기. 아세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지금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후원회 사무실도 있고…… 후원회 사무실에 뭐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통장 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데. 여기 언제 수색하실 거예요, 여기는?

○**법무부장관 이귀남** ……

○**이찬열 의원** 대답하십시오, 할 건가 안 할 건가.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찬열 의원** 해 놓고 이렇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

○**이찬열 의원** 그러면 내용 파악도 모르고 계시고, 또 수사지휘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뭐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휘권도 줬었다며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지휘감독권은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오늘……

○**이찬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는데 상황파악……

지금 총리님이나 법무부장관님이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전부.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이것 시간은 다 가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큰일 났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다 보셨지요, 전부?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어제 다 보내 드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지난 10월 14일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주재하시는데 총리님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찬열 의원** 못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를 몇 개를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2012년까지 7만 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찬열 의원** 2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2012년까지, 예.

○**이찬열 의원** 청년실업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청년실업률이 지금 한 8% 수준으로 해서 훨씬 많습니다. 한 100여 만 이상이 될 겁니다.

○**이찬열 의원** 122만 5000명입니다. 이것 답인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고용정책 2020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업자가 122만 명이 넘어가는데 고작 2년 동안 7만 1000명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이것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매년 총고용 증가가 한 3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로 청년에 관해서 7만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차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총리님, 그것 누가 그렇게 답변하라고 써 주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실업자가 122만 5000명인데 청년 실업 7만 1000개, 그것도 2년 동안에 7만 1000개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다른 방면으로……

○이찬열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쭙는 질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1년에 한 30여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 어떤 방면으로 창출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야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고용정책에……

○이찬열 의원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총리께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모든 경제상황의 변동이라든지 지수 같은 것을 평가를 할 때……

○이찬열 의원 그 얘기는 노동부장관이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지표를 전부 참작을 해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되고 따라서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다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는데……

○이찬열 의원 분명한 것은 실업자가 현재 122만 5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2년 동안 7만 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대한민국 고용전략 2020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9월 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인데 지금 프로젝트에서 7만 1000명을……

○이찬열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다 가는데. 정확하게 29만 8000명입니다, 실업자가. 그중에 취업 준비생이 62만 4000명, 그다음에 대충 '쉬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30만 3000명, 이래서 122만 5000명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7만 1000명의 일자리라는 것은……

○이찬열 의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록금 비싸게 내고 공부하는데 취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취직을 못 시켜 주려면 등록금이라도 깎아 달라는 얘기에요.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찬열 의원 만나보셨냐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만나봅니다.

○이찬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찬열 의원 제가 자리를 한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찬열 의원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등록금 문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금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어드리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여러 가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그 밖에 정부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등록금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총리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지금 청년들한테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높이를 낮추어서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이라도 참여를 해 달라, 또 고용전략 2020에도 정규직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이런 기간제 비정규직을 더 활성화하는 전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일자리는 대기업 학생들이, 대학 출신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82%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서로 매치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업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

○**이찬열 의원** 총리님, 이 표를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표에서 보듯이 근로환경 차이가 대기업·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한 번 울고 비싼 등록금 내고 취직을 못 해서 또 울고 이것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그게 상당한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대학생들의 욕구는 높는데 그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년실업 해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근로조건이 다소 떨어지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눈높이를 좀 낮춰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지금 구인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한 뒤에……

○**이찬열 의원** 총리님,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비싼 등록금 내고 졸업했는데 왜 우리 보고 눈만 낮춰서 가라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죽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생긴 오늘의 결과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찬열 의원** 그러면 총리님, 공공기관에서 매년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이찬열 의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찬열 의원** 거기 지금 몇 % 고용이 됐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3% 이

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했는데 259개 공공기관에서 1만 2000명이 고용되어 가지고 09년 실적이 전체는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5%니까 초과 달성이 됐는데 문제는 공기업에 따라서 그것을 채운 데도 있고, 못 채운 데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5%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만 그러나 3%를 채우지 못한 그런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것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내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한 것은 52.5%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47%, 5700여 명은 다 기간제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정말 어떤 부분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줘야 될 청년 고용 증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데 어디에서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공기업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기업선진화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불필요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특수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년들에게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경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찬열 의원** 총리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기간제 조금 채용하거나 아니면 38개 되는 데는 한 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뽑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안 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각 기업마다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한 2년 동안에 공기업선진화와 관련해 가지고 정원의 구조조정……

○**이찬열 의원** 이것은 정부의 관심 부족입니다. 청년실업을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청년실업이 얼마나……

○**이찬열 의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벨기에 정부의 로제타플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로제타플랜이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꼭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서 로제타플랜 같은 것도 응용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은 하지만 정말 사회적 책임이 있는 민간 대기업도 참여가 되어야 될 일인데 그쪽에는 전혀 손도 못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민간기업에 대해서 함부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합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기업에서도 고용을……

○**이찬열 의원** 협조를 받아야지요, 협조를.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하여튼 총리님께서 청년고용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학생들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대학 졸업하는 그 순간 대학 졸업은 삶의 질 저하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제일로 큰 게 일자리, 청년실업 문제하고 사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찬열 의원** 예산도 문제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여하튼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이 19조 8600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그중에 청년고용대책사업이 4707억입니다. 2.3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영향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2.37%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찬열 의원** 그러면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반드시 정부 정책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눈높이를 높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피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 일자리 수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일자리 300만 개 약속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2008년도 8월, 9월에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출범할 때 상황하고 그 뒤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호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 본 의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8만 1000개가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한 노력의 결과가 그래도……

○**이찬열 의원** 그 노력을 하면, 2.37% 가지고 과연 청년고용이 증대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먼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일자리 문제도 그와 상응해서 해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찬열 의원** 이것 예산 없으면요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 실행하기 다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 4대강 사업 예산, 불필요한 보, 과도한 준설, 이것 삭감하면 고용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법인세 0.5% 이것 고용지원기금으로 적립하세요. 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간 2000억 확보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차한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셔도 청년실업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총리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4대강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을 하고요.

○**이찬열 의원** 4대강 사업 여기 뒤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4대강 사업을 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은 공사의 성질상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의원** 아니, 한 군데 공사를 지금 나눠서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데 강으로 연결……

○**이찬열 의원** 다 사업장이 나눠져 있는데 동시에 빨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지요.

○**이찬열 의원** 2012년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강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한쪽……

○**이찬열 의원** 총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는 2010년 1월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깜박해 가지고 금강의 유등 1·2지구 같은데, 1지구 460m, 2지구 1.8km, 분명히 생태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작업할 때는 사전환경영향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환경영향평가 해 달라고, 약속으로 해 달라고 공문 온 것 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찬열 의원** 착오는, 1월부터 작업하여 9월 30일 날 환경영향평가 해 달라 그러는데 뭐가 착오입니까, 그게?

○**국무총리 김황식** 환경영향평가가……

○**이찬열 의원**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예타받은 것 별로 없지요? 10% 조금 넘지요?

다 폼수로 재해예방사업까지 시행령에다 고쳐 놓았고, 그 22조 된다는 것 10% 조금 넘게 예비타당성조사 받았습시다.

○**국무총리 김황식** 법적인 절차는 거쳤습시다.

물론 의원님 의견처럼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예타를 면제하도록 법령에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이 적정했느냐 어쨌느냐 하는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법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고 법적 근거는 확보하면서 여하튼 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 의원** 총리님, 재해예방사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붙이면 재해예방사업으로 다 통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시다.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비용·수익의 편에서 평가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찬열 의원**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수익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인데, 다만 법령상 시행령상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일응 갖추어졌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찬열 의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시다.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많은 국정 현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문제와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취임 한 달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서는 가장 힘든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

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어느 총리보다도 제가 생각건대는 진정성과 성실성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꼭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임 중에 부정부패가 없는 공무원 사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뢰가 충만한 사회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또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일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은 총 예순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일흔한 분의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의원(2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희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95인)

강명순	고승덕	권성동	김광림
-----	-----	-----	-----

김금래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재윤	김정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아	박은수	배영식	백성운
백재현	변용진	변재일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학용	안규백
여상규	원유철	유선호	유성엽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경재
이군현	이명규	이범래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용섭	이은재
이재선	이정현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이희창	임영호	임해규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경희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현기환	홍사덕	홍재형	

○속개 시 재석 의원(62인)

강명순	강승규	구상찬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성동
김성식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재균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학송	김희철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보환	박영아
박은수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신성범	심재철	양승조	유성엽
유일호	원희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관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전혜숙	정미경	정수성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주호영	진수희	차명진
최경희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천		

○산회 시 재석 의원(75인)

강기정	강명순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무성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태	김소남	김영선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노철래	박기춘	박보환	박영아
박은수	배영식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신낙균	신학용
안홍준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일호	유성엽	윤상일	이두아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이윤석
이은재	이진삼	이찬열	장병완
전병현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윤선	조정식	조해진
진수희	차명진	최규성	최경희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허천	황영철	

○청가 의원(11인)

강성천	권택기	김영록	김우남
안상수	이상민	이철우	정두언
추미애	한기호	홍희덕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입법차장	안병욱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황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무부장관	이귀남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환경부장관	이만희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출석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

【보고사항】

○의안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김정권·이상민·권선택·정의화·이용희·김을동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

김정권 · 이상민 · 권선택 · 정의화 · 이용희 · 김을동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김정권 · 이상민 · 권선택 · 정의화 · 이용희 · 김을동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김정권 · 이상민 · 권선택 · 정의화 · 이용희 · 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김정권 · 이상민 · 권선택 · 정의화 · 이용희 · 김을동 의원 발의)

11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조영택 · 김춘진 · 박은수 · 김재균 · 박영선 · 김동철 · 주승용 · 박주선 · 우제창 · 전병헌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사철 · 김용태 · 이진복 · 현경병 · 고승덕 · 임영호 · 유원일 · 박준선 · 허태열 · 조문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조영택 · 김춘진 · 박은수 · 김재균 · 박영선 · 김동철 · 주승용 · 전병헌 · 박주선 · 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4 황우여 · 주광덕 · 김옥이 · 이성현 · 김영진 · 고승덕 · 이해주 · 김세연 · 김기현 · 김선동 의원 발의)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환각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11. 4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주공9단지

아파트 904동 1302호 양지현으로부터 백원우 의원 외 60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천안함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2010. 11. 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산들마을아파트 605-2203 김성태 외 288인으로부터 박지원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11. 4 서울 용산구 후암동 406-101 대한 민국고엽제전우회 상임부회장 박근규 외 13만 2820인으로부터 정하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